

# 수원시 실업률 유형 분석 연구

2015

---

## 연구진

연구책임  
연구원

- 조용준 /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김창국 /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2013년 상반기 기준, 수원시의 실업률은 5.1%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국 156개의 시·군 중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도 초반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중점사업은 관할 행정 구역내 기업유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개수는 해당 지자체장의 업적으로 남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자체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입지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들도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로 수도권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설사 기업유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경기개발연구원, 2014)도 있다. 이는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기업유치시 고용률 증대와 실업률 감소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방세수 확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원시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바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고용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용지표의 경제학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실업률에 대한 유형을 산업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다. 이때에 인구학적 요인분석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노동이동현황,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수원시의 실업률 유형에 대한 분석을 가장 큰 분석의 틀로 정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간적 범위는 주로 수원시 전(全)지역을 기본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로는 2008년 ~ 2014년까지의 관련 통계청DB자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지역 고용통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용지표의 경제적 의미와 실업률 관련 주요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고용 관련 통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원시의 실업률 유형을 산업적 특성 및 인구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넷째, 분석한 수원시의 고용시장의 특성을 종합하여 고용정책에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광업·제조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액 10억 원당 취업자 수로 계산되는 취업계수를 살펴본 결과 수원시는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취업계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용창출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시는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9위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0세~49세 여성 고용률은 경기도 내 지자체 중 20번째로 다소 낮은 편에 속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수원시의 임금근로자수 비중이 2014년 하반기 기준 82.4%로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2번째로 높다.

종사자 직업별로는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 중위권에 해당한다. 실업률은 2012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하반기 실업률은 2.7%를 기록하며 경기도 내에서는

11번째로 낮다.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4년 기준 7.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과 비교해보면 수원시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비중은 9번째로 높은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0번째로 낮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고 있는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학, 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실업률의 감소와 고용률의 증가를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이 중요한 시점이다. 2008년~2012년에 수원시는 평균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2.0%에 그쳤다. 이는 삼성전자가 타지자체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삼성전자의 R&D 인력들도 서울 이전을 계획한 상태이다. 현재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드론산업 등 첨단산업과 연계된 수원시만의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이 시급하다.

둘째, 경력자들의 재취업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수원시의 50~60세 남성고용률은 79.8%로 경기도 내에서 6번째로 낮은 순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남성들이 희망퇴직 등으로 은퇴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긴 하지만, 타 지자체보다 50~60세 남성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

#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실업률 및 고용률 이론분석	4
제1절 지역고용통계 현황	4
1. 지역고용통계 작성현황	4
1) 시도별 통계	6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6
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 동향 특별조사)	9
다.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10
2) 시·군별 통계	11
가. 전국사업체조사 및 지역별 사업체조사	11
나. 사업체노동력실태현황	13
다. 지역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14
라. 지역별 고용조사	15
2. 지역 고용통계의 문제점	19
제2절 고용지표의 경제적 의미	21
1. 개념 및 산출방법	21
2. 지표산출의 한계점	23
제3절 실업률 관련 주요 논의	25
1. 고용지표를 이용한 지역별고용변화 분석의 한계	25
2. 체감실업률과 통계적 실업률의 괴리현상	26
3. 실업률 보조지표 도입	29
4. 실업률 상승의 사회구조적인 원인	32
5. 지역고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6

제3장 수원시 실업률 유형분석 .....	39
제1절 산업적 요인 분석 .....	39
제2절 인구적 요인 분석 .....	45
1.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	45
1)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	45
2) 고용률 현황 .....	46
3) 취업자 특성 .....	48
가. 성별·연령계층별 취업자 특성 .....	48
나.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	54
다. 종사자 직업별 취업자 .....	57
4) 실업률 현황 .....	59
2. 노동이동현황 .....	61
3.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	67
1) 고령화 사회비율 .....	67
2) 성별·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	68
3)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71
4)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	73
제4장 결 론 .....	76
제1절 분석결과 .....	76
1. 수원시의 산업 특성 .....	76
2. 수원시의 고용 및 실업 특성 .....	76
3. 수원시의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	78
제2절 정책제언 .....	79
1.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	79
2. 경력자들의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	80
참고문헌 .....	81
Abstract .....	82

# [ 표 목 차 ]

[표 2-1] 지역고용통계 현황 .....	5
[표 2-2] 지자체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항목 .....	13
[표 2-3]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항목 .....	14
[표 2-4]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항목 .....	15
[표 2-5] 통계적 실업과 체감실업률의 차이 .....	28
[표 2-6] 잠재노동력의 구조 .....	31
[표 2-7] 한국 경제 전망 .....	34
[표 3-1] 수원시 산업별 취업자 수 .....	40
[표 3-2] 수원시 산업별 종사자수 .....	43
[표 3-3] 수원시 종사자 지위별 서비스업 취업자 수 .....	44
[표 3-4] 수원시 성별 고용통계 .....	49
[표 3-5] 수원시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	50
[표 3-6] 경기도 시·군별 연령계층별 남성 고용률 비교 .....	50
[표 3-7] 경기도 시·군별 연령계층별 여성 고용률 비교 .....	52
[표 3-8] 2008, 2014년도 수원시 종사자 지위별 증감 비교 .....	55
[표 3-9] 수원시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	55
[표 3-10] 수원시 직업별 취업자 수 .....	57
[표 3-11] 시·군별 종사자수 및 노동이동 현황 .....	62
[표 3-12] 수원시 성별·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	69
[표 3-13] 경기도 시·군별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69
[표 3-14] 경기도 시·군별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	70
[표 3-15] 수원시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71
[표 3-16] 경기도 시·군별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72
[표 3-17] 수원시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	73
[표 3-18] 경기도 시·군별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	74

# [ 그림 목 차 ]

[그림 2-1] 경제활동 인구조사 흐름도 .....	7
[그림 2-2]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흐름도 .....	17
[그림 2-3] 경제활동인구 구성 .....	22
[그림 2-4] 실업률과 고용률 관련 기본개념들 .....	26
[그림 2-5] 실업률 보조지표 .....	30
[그림 2-6] 사내유보율 추이 .....	33
[그림 2-7] 국가별 15~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	35
[그림 2-7] 지역고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상호관계 .....	37
[그림 3-1] 경기도 시·군별 평균 지역내 총생산 .....	39
[그림 3-2] 경기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기준 산업별 비중 .....	41
[그림 3-3] 경기도 시·군별 종사자수 기준 산업별 비중 .....	42
[그림 3-4] 경기도 수원시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45
[그림 3-5] 경기도 수원시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46
[그림 3-6] 경기도 수원시 고용률 비교 .....	47
[그림 3-7] 경기도 시·군별 고용률 .....	48
[그림 3-8] 수원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52
[그림 3-9] 수원시 종사자 지위별 근로자수 비중주: 2014년 하반기 기준 .....	56
[그림 3-10] 수원시 종사자 직업별 비중 .....	58
[그림 3-11] 수원시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	59
[그림 3-12] 경기도 수원시 실업률 비교 .....	60
[그림 3-13] 경기도 시·군별 실업률 .....	61
[그림 3-14] 경기도 시·군별 임직률 .....	62
[그림 3-15] 수원시 임직률 추이 .....	64
[그림 3-16] 경기도 시·군별 이직률 .....	64
[그림 3-17] 수원시 이직률 .....	65
[그림 3-18] 경기도 빈 일자리율 비교 .....	66
[그림 3-19] 경기도 빈 일자리율 비교 .....	66
[그림 3-10]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 .....	67

## [ 수 식 목 차 ]

[수식 2-1] 경제활동참가율 계산법 .....	21
[수식 2-2] 실업률 계산법 .....	23
[수식 2-3] 고용률 계산법 .....	23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2013년 상반기에 수원시의 실업률이 5.1%를 기록하면서 전국 156개의 시·군 중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는 통계수치의 의미는 “수원시에는 실업자가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있어서 시정의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고용률과 실업률 수치이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증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게 마련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도 초반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중점사업은 기업유치였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는 부지제공,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 전달체계의 최종 수혜자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개수는 바로 해당 지자체장의 업적으로 남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자체들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및 입지조건을 갖춘 투자처로 인식한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의 기업유치는 쉽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경기도의 16중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점점 인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자체의 기업유치에 대한 열기는 서서히 식고 있다. 설사 기업유치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sup>1)</sup>은 기업관련 지방세는 신장률이 불안정하고

지역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지자체가 운이 좋아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유치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가 지방세수로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각 지자체가 고용률 증대와 실업률 감소를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수원시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한다. 지역고용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용지표의 경제학적 의미를 논의한다.

수원시의 실업률에 대한 유형을 산업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다. 인구학적 요인분석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노동이동현황,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수원시의 실업률 유형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실업률 수치 발표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정부발표 실업률의 차이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 함의로 도출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수원시 실업률의 유형을 분석하여 시의 고용정책방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

1) ‘지자체 기업유치노력, 지방세 연계 필요’, 경기개발연구원, 2014.10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주로 수원시 전(全)지역이지만, 실업률이라는 연구주제의 특성상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를 비교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내용도 범위에 포함된다.

시간적 범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 2. 연구의 방법

첫째,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한다. 경제학적 정의 외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분석방법의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지역고용통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용지표의 경제적 의미와 실업률 관련 주요 논의를 분석한다.

셋째, 지역고용 관련 통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원시의 실업률 유형을 산업적 특성 및 인구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넷째, 분석한 수원시의 고용시장의 특성을 종합하여 고용정책에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언한다.

# 제2장 실업률 및 고용률 이론분석

## 제1절 지역고용통계 현황

### 1. 지역고용통계 작성현황

1995년 민선 지방자치체제 도입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체제 도입 초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계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 지역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로 인한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외환 및 금융위기로 인한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지역고용통계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계 조사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다. 경기도의 지자체 중에서 4~5개의 지자체정도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경제지표조사 정도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고용통계는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인구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등이 있고 166개 시·군을 공표범위로 하는 전국사업체조사 및 지역별 사업체조사, 사업체노동력실태현황,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이 있다.

[표 2-1] 지역고용통계 현황

공표범위	통계명	조사항목	조사주기
시도별(7개 특광역시, 9개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취업자(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종사자지위별, 취업시간별, 성/연령별, 산업별, 직업별), 실업자(성별, 연령별), 실업률(성별,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활동상태별) 부가조사(근로형태별, 청년층, 고령층, 비임금근로)	매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동향 특별조사)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매년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지역별 현원(성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외국인인력, 학력별, 전공), 규모별 현원(성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외국인인력, 학력별, 전공)	매년
156개 시·군별	전국사업체조사 및 개별 지역별 사업체조사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산업별, 동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구분별, 조직형태별)	매년
	사업체노동력실태현황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시도별, 산업별, 규모별, 성별, 종사자지위별)	매년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상용근로일수, 상용총근로시간, 상용소정실근로시간, 상용초과근로시간, 상용월급여액, 상용정액급여, 상용초과급여, 상용특별급여	매년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총괄,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성/연령별, 산업별, 직업별, 종사자지위별), 비경제활동인구(성/연령별, 활동상태별, 교육정도별), 타지역 통근취업자, 근무지기준 취업자(성/연령별, 산업별, 직업별, 종사자지위별)	반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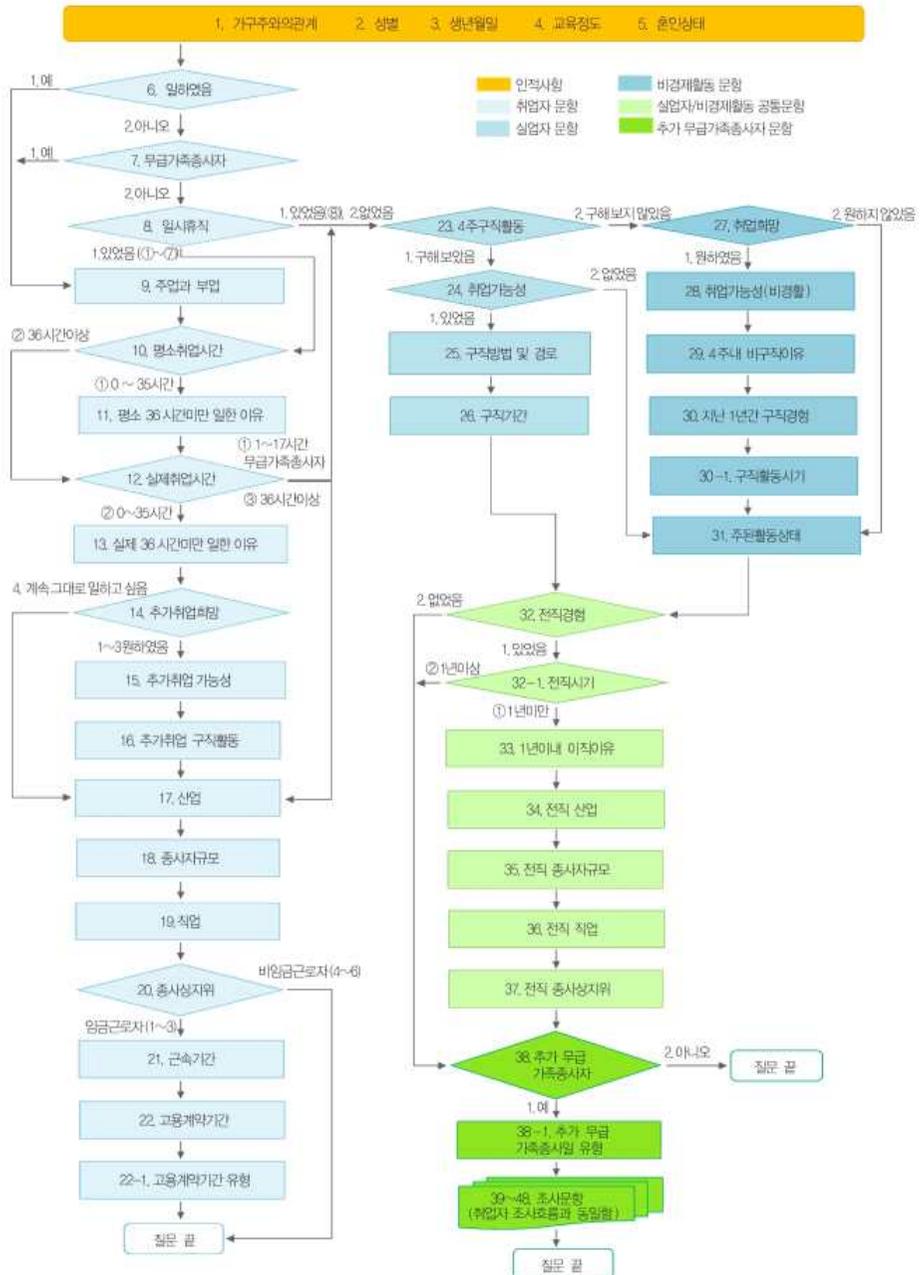
## 1) 시도별 통계

###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가의 중장기 고용정책수립뿐만 아니라 학계 및 연구기관의 각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고용통계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2년에 통계법에 의해 지정된 지정통계(10104호)로서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국민 경제 활동의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목적은 거시경제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요변경사항을 살펴보면 1982년에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주기를 분기단위에서 월단위로 변경하였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교육 시설 확충으로 인해 중학교 진학률이 99%를 상회하고, 1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극히 저조해짐에 따라 조사 내용도 바뀌었다. 1987년 1월부터 그동안 적용된 조사대상 하한 연령을 14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후, 1996년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실업률 국제비교를 위하여 OECD 국가들이 작성하고 있는 실업자 기준과 일치시킬 필요성에 따라 조사표를 개편하여 1998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그림 2-1] 경제활동인구조사 흐름도

2003년 1월에는 취업자들의 부업소유여부를 파악하여 취업시간을 주업과 부업으로 구분하였고, 실업자에 대한 취업제의 여부와 미취업 사유 여부를 추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활동 상태를 세분화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조사표를 개편하여 적용하였다. 2005년 7월에는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실업통계의 기준인 「구직기간 4주」로 변경하여 1999년 6월 자료까지 소급 적용하였다.

2008년 1월에는 실업자관련 일부항목(희망근무형태, 취업제의 여부, 미취업사유)을 삭제하고 구직경로 및 구직방법 항목을 나누어 파악하도록 조사표를 개편하였다.

2010년 1월에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를 공표하고, 2014년 11월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기준을 적용한 고용보조지표를 작성·발표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역고용통계는 지역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9년 3/4분기부터 시·도별 자료를 연보에 수록하면서 시작되었다. 1998년 1월부터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월별로 시·도별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현재 매년 5월에는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부가조사<sup>2)</sup>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8월에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단위로만 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방법은 5개 지방청 및 49개 지방사무소 조사담당 직원이 표본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조사대상 주간동안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며,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 면접하여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표본조사가구인 약32,000 가구 내에 상주하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따라서 전국 규모추정을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표본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도별/성별구분 자료는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서도 행정구역별 구분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조사지역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 개편이 이루어진다. 현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629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표본조사구내 3만2천 가구를 조사(가구 추출률 0.2%)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체조사구(표본조사구와 전수조사구를 포함)와 총조사 실시 이후부터 표본개편시까지의 신축아파트 3,097개 조사구를 포함하여 광역조사구 18,934개, 광역조사구내의 일반조사구 305,779개를 최종 표본추출 틀로 정하여, 7개 도시(특·광역시)와 9개도의 동 및 읍면부로 나누어 전국을 25개 계층으로 층화한다. 다음으로 전국의 가구 수를 크기척도로 하는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1,629개 조사구(조사구당 평균 20가구)로 나누어 약 32,000가구를 선정한다. 이들 조사구 내에서는 무작위로 주어진 시작가구번호의 가구로부터 20가구를 추출하여 평균 5가구씩의 4개의 조사구역으로 나누고, 이 구역 내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 동향 특별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1976년에 통계청 지정통계 11805호로 승인된 통계로서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력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조사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존의 「사업체고용동향조사특별조사」 명칭은 2010년 12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로 통계명이 변경되었다.

조사대상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A),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전 산업. 단, 국·공립 교육기관 등 공무원 재직기관은 제외된다.

조사공표범위는 전국단위로만 공표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6개의

광역시 이상 지역 단위(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별로 조사 결과 공표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는 16개 광역시도별로 조사결과 공표가 확대되었다.

모집단은 전국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고용 사업체로 추출 틀은 2008년 12월말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이다. 추출단위는 지역별/산업별/규모별로 나누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소분류(211개)와 사업체 규모(6개)에 따라 구분하며 1,688개 층으로 층화가 구성되어 있다. 표본규모는 32,000여개이다.

조사항목은 5개 영역,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사업체 현황(사업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 소재지, 경영형태, 사업형태, 주요생산품명·영업종목)이다. 둘째, 근로자 현황[총 근로자수, 내국인(상용근로자, 기타), 외국인근로자]이다. 셋째, 현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이다. 넷째,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구인경로, 다섯째,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이다.

수록된 통계자료는 전국의 경우, 산업-중(中), 직종-소(小)분류이며, 16개 광역시도의 경우, 산업-대(大), 직종-중(中)분류이므로 하위분류별 통계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 다.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조사를 주관하는 통계로 산업기술인력의 현원 및 부족인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의 수급전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통계이다. 여기서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관련 업종의 연구개발·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조사대상은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사업체 중 11,682개 표본사업체로 「2012 전국사업체조사」의 10인 이상 사업체 중 제조업 및 제조업

기본 서비스업 등에 속한 90,102개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구체적인 조사층화방법을 살펴보면, 전국층화는 1차적으로 35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층화한다. 35개 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 76개) 중 산업기술인력과 관련된 제조업(12대 주력산업 포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영상제작 및 통신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이 해당된다. 12대 주력산업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 등 12대 주력산업이 포함된다.

이렇게 1차 층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산업 내에서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5개 규모별로 2차 층화한다. 이때 층별 분산의 크기를 고려하여 300인 이상은 전수층으로 300인 미만은 표본층으로 층화한다. 표본크기는 산업기술인력의 현황을 주요관심 변수로 하여 네이만(Neyman) 할당법에 따라 결정 하여 배분한 후 일부 조정하여 결정하고,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전수추출한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사업체 일반현황, 산업별·직업별·지역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 퇴사인력, 구인인력 및 채용인력, 미충원인력, 1년 동안 채용예상인력 등이다. 이 통계는 2005년부터 작성되고 있으며 조사주기는 1년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세분류 기준 426개) 중 산업기술인력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직업의 개수는 총133개이다.

## 2) 시·군별 통계

### 가. 전국사업체조사 및 지역별 사업체조사

전국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37호)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을 파악하여 표본 틀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제공 등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 사업체는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이다.

사업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또는 법적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이 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어 1개의 기업체가 여러 개의 장소에서 산업 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이때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이며,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의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순수하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우도 포함],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 회사 등의 회사법인(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

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회사이외의 법인(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단체가 있다.

각 지자체들은 매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가 실시될 때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일시기에 통합하여 지자체별로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공통항목 11개에 각 지자체별로 설정한 맞춤형 자율항목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이다.

[표 2-2] 지자체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항목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대표자 성별, ④대표자 연령, ⑤소재지, ⑥창설연월, ⑦조직형태, ⑧사업체 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법인등록번호, ⑪사업의 종류, ⑫종사자 수, ⑬연간매출액, ⑭사업체 전입 및 창업 이후 투자 계획, 사업체 운영시 애로사항

## 나. 사업체노동력실태현황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통계법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11821호)로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서 노동행정 기준에 맞게 가공·집계하여, 사업체 및 종사자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임금근로자가 없는 사업체를 제외하고 재구성된다. 임금근로자가 없는 사업체는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를 말한다.

집계방법은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 중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또는 기타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집계한다. 집계대상은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를 집계하며, 대상 산업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조사된 사업체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분류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재직하는 사업체를 집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지역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노동수요주체(사업체)의 관점에서 시·군·구 단위의 빈 일자리수와, 입·이직자수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계이다. 이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지정통계(제11802호)에 의거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부가조사로 2011년부터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연 2회(5월,11월)실시하고 있다.

[표 2-3]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항목

영역		조사항목
1. 사업체 현황		1. 사업체명 2. 사업체 소재지 3. 사업내용 또는 생산품목 4. 응답자 성명 5. 전화번호
2. 종사자수 및 빈 일자리, 입·이직에 관한 사항		1. 종사상지위(상용, 임시·일용, 기타)별, 성별 근로자수 2. 빈 일자리 수, 입직자 수, 이직자 수
3.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3.1 상용	1. 종사상 지위 2.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수 3. 근로자수 변동사유 4. 소정(의무)근로일수 5. 소정근로일중 출근하지 않은 일수 6. 휴일에 근로한 일수 7. 소정근로시간 8. 초과근로시간 9. 근로시간변동사유 10. 임금총액(세금공제전) 11. 정액급여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12. 초과급여 (연장·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3.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 14. 고정상여금 15. 임금변동사유
	3.2 임시·일용	1. 실제근로일수 2. 실제근로시간 3. 임금총액(세금공제전)

조사대상은 전국 228개 시·군·구[69개 자치구, 77개시(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와 세종시 포함), 82개군]별 종사자 1인 이상인 약 20

만개의 표본사업체이다.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농림어업, 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된다.

## 라. 지역별 고용조사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얻은 통계는 시·군별 고용률·실업률, 산업·직업별 취업자 등 다양한 고용통계는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사회보험가입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활동 촉진 및 일·가정 양립정책 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 사업효과 분석 등에도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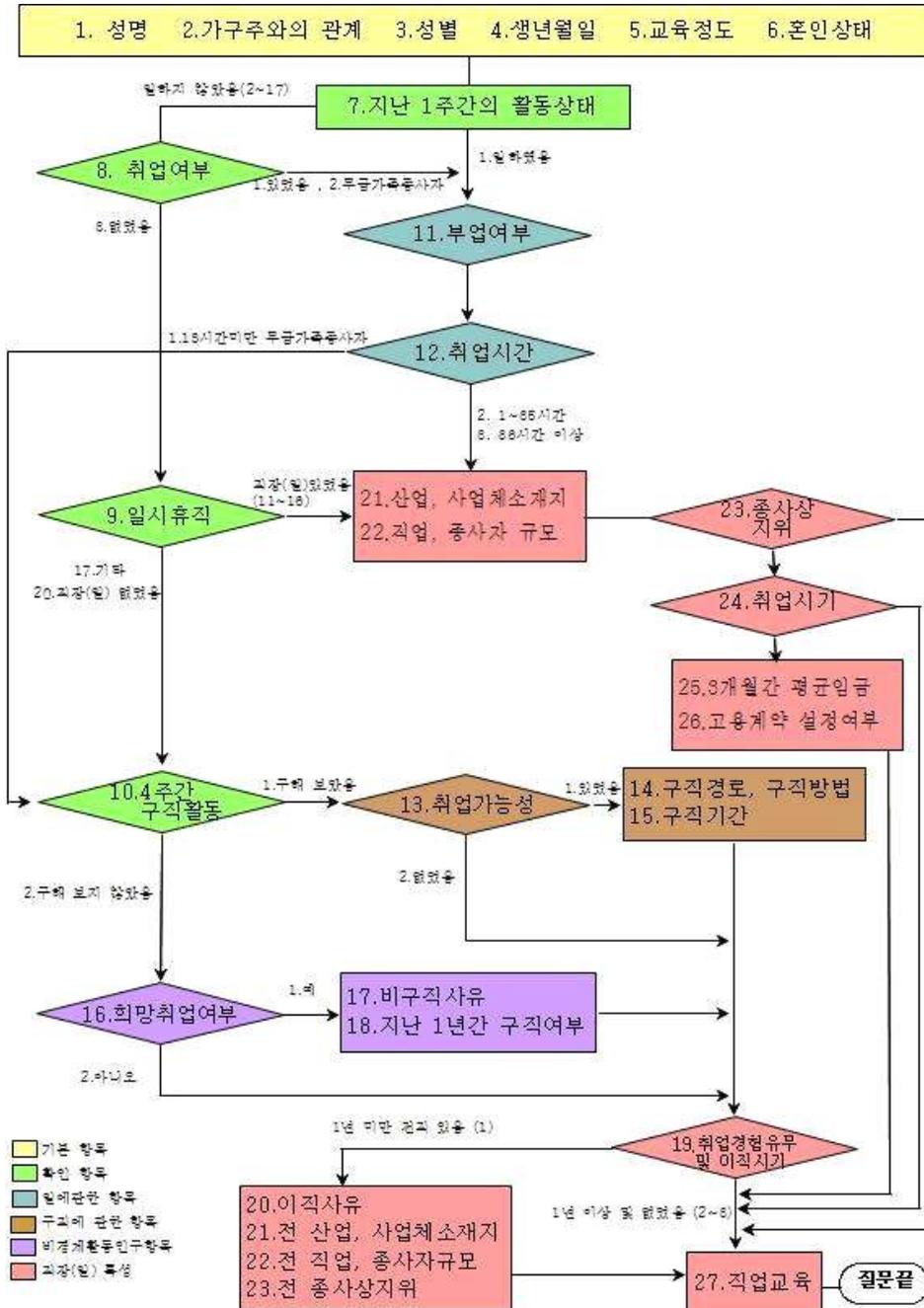
[표 2-4]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항목

항목	내용
기본항목(6개)	①성명 ②가구주와의 관계 ③성별 ④생년월일 ⑤교육정도 ⑥혼인상태
확인사항(4개)	①주된 활동상태 ②취업여부 ③일시휴직여부 ④구직활동여부
취업시간(2개)	①부업시간 ②취업시간
구직사항(6개)	①취업가능성 ②구직경로 및 방법 ③구직기간 ④취업희망여부 ⑤비구직 사유 ⑥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직장사항(8개)	①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②이직사유 ③산업(주된 활동, 직장소재지) ④직업(하는 일, 일한 부서명, 종사자수) ⑤종사상지위 ⑥현직장 취업시기, ⑦월평균임금 ⑧고용계약기간
부가조사항목	(경력단절여성통계) ①경력단절기간 ②경력단절사유 ③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여부 (사회보험) ④사회보험가입여부 (교육훈련) ⑤지난 1년간 교육훈련 참여여부 ⑥직업훈련 관련여부

지역별고용조사에는 반기별(4월, 8월)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등 취업여부, 취업시간, 구직여부, 구직활동, 월평균 임금, 경력단절여성, 사회보험가입현황 등 3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다. 32개 항목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부가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경력단절여성 통계, 사회보험, 직업교육훈련 등의 항목이 해당되고, 하반기에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유연근무제, 맞벌이가구 항목 등이 해당된다.

조사대상에서 조사단위는 개인이며, 모집단은 조사대상의 당해 월동안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인 자[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이다.



자료: 통계청

[그림 2-2] 지역별 고용조사 조사흐름도

조사대상범위는 매해 반기 조사월(4월, 10월)의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담당자(임시 조사 직원)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응답자기입 방법이 병행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 중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 및 섬조사구(일부 군)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 구체적인 표본추출방법은 층화 2단 집락추출기법으로 1차 추출 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를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사용하며, 실제 조사하기 매우 곤란한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 지역 조사구는 제외된다.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는 확률비례계통추출(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에 의한 인구주택총조사구이다. 2차 추출 틀은 1차 추출 틀의 조사구에서 추출한 8,721개 조사구 중에서 임의추출(Simple random sampling)에 의한 가구를 추출한다. 이 때 층화는 공표단위인 총 163개층(7개의 특별시·광역시와 156개 시·군)을 주 층화 변수로 사용하고, 이렇게 층화 후 조사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류지표(농림어가비율, 60세 이상 인구비율, 15~29세 비율, 30~40세 이상 대졸자비율, 전월세 가구비율, 자가 비율, 1인 가구비율, 주택유형 등)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추출하는 부차층화를 실시한다.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에 모집단의 가구특성 및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사후층화한 시도 최종가중치를 이용한다. 또한 시도 모수 추정 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준거표본으로 하고, 반복비례가중법으로 시도 단위 보정작업을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보정하는 벤치마킹기법으로는 시도 및 전국편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자료(지역별고용조사 해당 월)를 준거표본으로 하고, 반복비례가중법으로 보정한다. 반복비례가중법(iterative proportional weighting method)은 모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주변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사후 가중치 보정 방법으로, 각 특성 변수의 주변분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그룹 내의 모집단 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 2. 지역 고용통계의 문제점

지역의 고용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지역노동시장 정보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는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고용통계가 부족하고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대부분 공표범위가 광역시와 도단위 통계이며, 기초자치단체 행정단위인 시·군단위의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통계는 지역별고용조사와 사업체조사에 한정되어 있다.

지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공간적 범주로서 지역의 단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이진면, 2005). 지역별고용조사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지역 노동통계는 지역 자체의 필요에 의해 작성되고 있기보다는 대부분 전국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통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통계라는 한계가 있었다.

2008년 지역별 고용조사가 시작되면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취업자에 대한 성별, 연령계층별,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직업별 비교를 통해 고용구조 파악을 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업자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실업자에 대한 정보는 단순 증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고용정책 마련을 위해서라면 실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업자의 연령분포, 성별 분포, 최종학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교육훈련과 같은 재취업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해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 데이터는 원자료에서 조사오류 및 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개별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로써 통계작성, 통계분석의 기본이 되는 개별 자료를 말한다. 지역별고용조사의 코드를 살펴보면 구직경로(공공 직업알선기관, 민간 직업알선기관, 대중매체, 학교·학원, 친척·친구·동료 등), 구직방법(시험응시, 구직등록, 사업체 문의, 자영업 준비) 등 실업자들의 구직방법과 기간에 관한 응답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군별 통계를 살펴보면 시·군별 실업자 및 실업률, 산업 및 직업 중/소분류 등 표본이 작아 표본오차가 큰 경우와 통계청이 KOSIS 등에 공식 발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에 유의하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에서는 공표범위의 제약은 표본이 작아 신뢰도가 떨어지고 표본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시자료 사용 시 통계청의 공표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는 내부적으로만 활용해야하며, 이를 외부에 공표 시 그 자료에 대해서 통계청은 책임지지 않는다.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같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단순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표본오차를 넘어서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보다 정확한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지역별고용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제공함과 동시에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계적 정확성을 가지면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할 것이다.

더불어 공표범위의 문제는 조사방식 및 생산주기와의 관련이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다 더 많은 표본수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조사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남경현 외 2012). 지역별고용조사는 2008년 10월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010년 12월에 연간조사에서 분기조사로 조사주기가 변경되었다가 2013년 4월부터는 반기(4월, 10월) 조사로 다시 변경되었다.

통계는 그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통계의 시의성도 뒤따라야 한다. 작성기준과 결과발표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반기별로 공개되는 시·군별 고용관련 통계는 중장기적인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인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과 실업 등 국가 경제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석에 대해서는 국가통계뿐 아니라 지역통계에 대해서도 정확성과 시의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2절 고용지표의 경제적 의미

### 1. 개념 및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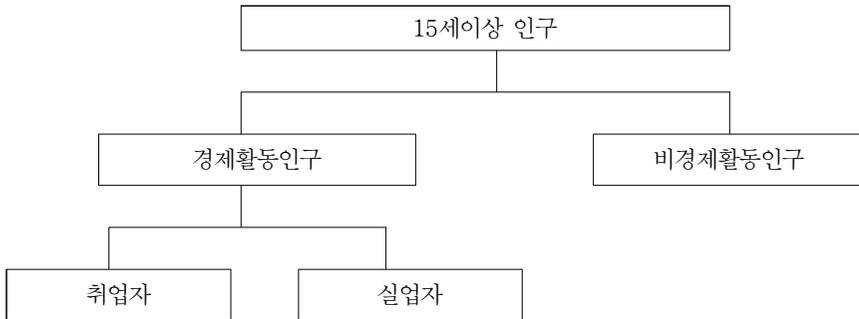
고용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수식 2-1] 경제활동참가율 계산법

$$\text{경제활동참가율} = (\text{경제활동인구} \div \text{15세이상인구}) \times 100$$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노동을 한 취업자와, 노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한 숫자이다.



[그림 2-3] 경제활동인구 구성

실업률이란 특정한 지역의 실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지표이다. 실업률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지표로써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기준에 의하면 실업자는 임금 또는 비임금근로자가 아니고(Without work), 기준기간동안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일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Seeking work)을 한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지만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실업자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우리나라의 기준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부터는 큰 틀에서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준용한다.

[수식 2-2] 실업률 계산법

$$\begin{aligned} \text{실업률} &= (\text{실업자} \div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 \text{실업자} \div (\text{실업자} + \text{취업자}) \times 100 \end{aligned}$$

반면,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를 계산한 수치이며, 이때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는 기준기간(1주일 또는 1일)동안 임금을 위해 일정시간의 일을 하였거나,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비임금근로자는 기준기간 동안에 수입 또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일정시간의 일을 하였거나,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 가구 내의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등을 포함한다.

[수식 2-3] 고용률 계산법

$$\text{고용률} = (\text{취업자} \div \text{만 15세이상 인구}) \times 100$$

## 2. 지표산출의 한계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단순히 지역 간 실업률을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고용정책 및 일자리 창출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고용현황 지표로써 사용하기

에도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은 지역 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각 지역의 지역별 실업특성과 산업특화를 비롯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률이 높은 지자체 또는 낮은 지자체들의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 발달정도의 상관관계가 불확실하다.

실업률의 정의를 상기한다면,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부적합성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실업률 조사 지역의 도시화가 높을수록 주어진 일자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인구들이 할당되어,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어 실업률로 나타난다. 이는 각 지방정부의 고용정책 또는 일자리 창출정책의 성취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발달된 도시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발생하는 각 지역의 인구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직실업자 또는 실망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는 실업률의 정의를 보완하기 위해 부각된 지표들 중의 하나가 고용률이다. 고용률은 실제의 실업 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 개념 대신 현실의 상태를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업자 수와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 인구)의 개념을 사용한다. 가령, 앞에서 언급했던 실제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실망실업자가 증가하여 실업자 수가 실제 증가분 보다 적게 산정되더라도, 취업자 수와 15세 이상인구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보다 현실에 근접한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고용률은 실업자 수를 사용하는 부정적인 개념의 실업률과는 달리 취업자 수를 사용하는 긍정적인 개념으로써 실업자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취업자 수로 인해 그 수치 자체가 60-70%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2-6%대로 나타나는 실업률의 수치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용이 갖는 정확성이 수치 자체의 크기에 의해 그 의미가 평

가절하 될 수 있다. 또한 경기흐름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인구수를 수치로 사용하는 것은 정적인 상태의 현실에 대해서는 근접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동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에 대해서는 지역 별로 구분되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제3절 실업률 관련 주요 논의

### 1. 고용지표를 이용한 지역별고용변화 분석의 한계

실업률과 고용률은 지역별로 취업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취업 상황에 대한 주요 경제지표들인 실업률과 고용률이 지역별 고용현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게 되는 이유를 아래의 [그림 2-4]는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실업률 측면에서 실업자(U)는 개념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LP)에 포함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비경제활동인구(NLP)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실업자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에도 실업률 수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고용률 측면에서는 이러한 실업률의 개념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5세 이상인구를 분모로 하여 그에 대한 취업자 비중을 계산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각 지역별로 뚜렷하게 구분할만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 모두 인구 개념을 분모에 반영하고 있어서 해당지역의 고용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성과가 아닌 인구구조적 요인이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각 지역별 실업자와 취업자 수의 변화를 비교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할 정도로 그 변화 정도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4] 실업률과 고용률 관련 기본개념들

## 2. 체감실업률과 통계적 실업률의 괴리현상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실제보다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이 다른 국가와 다르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취업을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실업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듯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무직자를 모두 실업상태로 파악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러므로 통계청의 발표대로 취업구조나 고용관행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 간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청의 조사 방법이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해서 국

민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수치를 인지시킨다는 쪽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통계조사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첫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의 경우 실업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사대상기간 중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이는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만약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지만 조사대상기간 중에 구직의사가 없었던 구직 단념자를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날 경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수는 생산가능 인구 개념에 비해 자의적이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 장애인 혹은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 장애인에 한정될 뿐이다. 주부와 학생들은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될 경우, 본인의 근로 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실업자 또는 실망실업자로 계상된다. 이들과 같이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실업자 또는 실망실업자들은 실업자 수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됨으로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의 상황과 일치하기 어려운 실업률 통계가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실업발생 가능성이 낮은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또한 취업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2.5%로 나타나 일본(8.8%), 미국(6.5%)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실업통계 구조상,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그만 두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구조이다.

[표 2-5] 통계적 실업과 체감실업률의 차이

통계적 실업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지 않았고,</li> <li>○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며,</li> <li>○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구직 단념자, 단시간 근로자 등</li> </ul>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최대 8개월로 최대 2년인 덴마크, 최대 3년인 프랑스, 최대 30주인 미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이 발생할 경우 구직활동을 지속하지 않고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높이는 요인이므로 통계적 실업률을 감소시키지만 체감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통계작성법상의 차이점도 체감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노동력 표본조사통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등록통계를 이용하여 실업률을 측정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실업률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노동력 표본조사통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본인의 실업상태를 적극적으로 밝힐 유인이 없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직등록통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직등록이라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실업자 수를 과약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넷째,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이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는 2003년 25만 명, 2008년 28만 명, 2014년 30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후기산업사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자리(특히 양질의 일자리)의 증가는 체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자리에 대한 이런 수요(기업)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취업준비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균형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의 발생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임시직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상용직 고용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1주일에 한 시간 이상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처럼 불안정한 준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자신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이지만 통계수치상 취업자이기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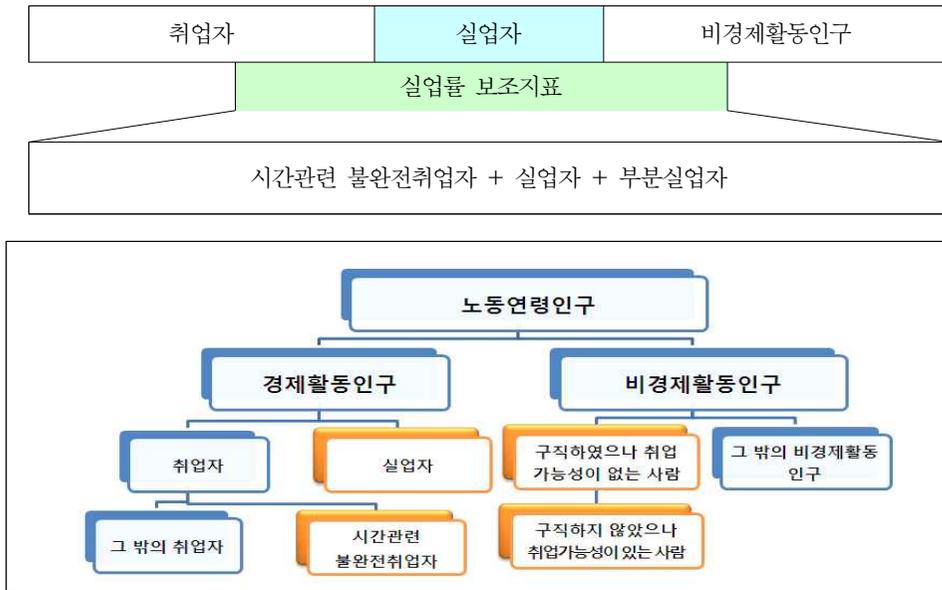
### 3. 실업률 보조지표 도입

201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9%이다. 경제학에서 실업률이 3~4%이면 완전고용상태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완전고용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에 해당하지만, 우리의 고용률 역시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잠재적 실업자군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공식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 실업률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상태에 있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인구가 많아 과소 측정되는 문제가 있다(황수경, 2010)는 지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그림 2-5] 실업률 보조지표

현행 실업률 통계의 국제기준은 제13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1982)에서 제정된 것으로 현재의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노동 저활용(Labour underutilization)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없어 실업자 외에 불충분한 취업욕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작성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노동저활용이란 실업자 외에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일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

구와 같이 사회적 관점에서 노동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표 2-6] 잠재노동력의 구조

구분		일하지 않았음	구직활동	취업 가능성	원하였음
실업자		○	○	○	-
잠재 노동력	비가능 구직자	○	○	×	-
	가능한 잠재구직자	○	×	○	-
	의지있는 잠재구직자	○	×	×	○
	순수비경제활동인구	○	×	×	×

자료: 통계청

1982년에 제정된 실업률 통계의 국제기준이 그간의 산업경제 체제 변화에 부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2013)에서 실업자 외에도 일하길 희망하여 고용시장에 진입 가능한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런 국제기준을 적용한 고용보조지표를 우리나라의 통계청도 2014년 10월부터 적용하여 발표하고 있다. 실업률 보조지표는 실업자 외에 취업에 대한 욕구(need)가 있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개념으로써 실업자 외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력을 포함하고 있다.

취업자 중에 단시간 근로자(주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잠재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의 사례로는 지난 4주간 한번이라도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지난주에 갑자기 일시적인 병이나 심신장애 또는 가사·육아·가족일 등으로 인해 일이 주어졌을 때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다. 잠재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의

사례로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이 주어지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취업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시험 준비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므로 실업자와는 상이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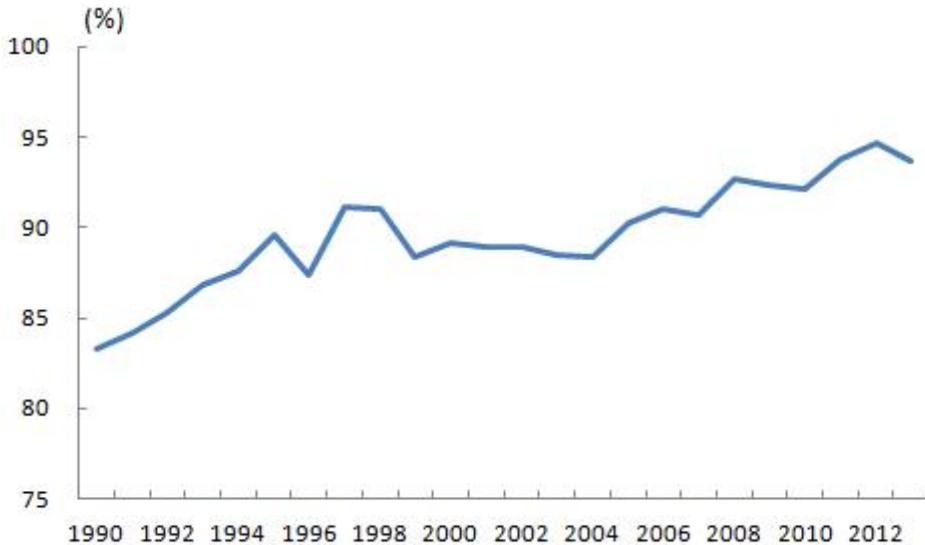
취업희망 여부는 통계조사시 취업 희망여부를 질문하여 응답자가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면 ‘취업희망’으로 파악한다. 또한, 시험공부, 취업학원 수강, 직업교육기관 참석 등 구체적인 직장(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참고하여 조사한다. 취업가능성 여부에 대한 파악은 취업이 불가능한 제약요건이 있는지를 감안하여 ‘직장(일)’을 준비하는 일, 취업을 희망하는 일 등을 포함한 모든 일이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할 수 있는지를 통계조사시 질문한다. 취업이 불가능한 제약요건은 일시적 병(사고), 심신장애, 가사·가족일, 육아, 학교·학원(진학), 나이가 많아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측정된 고용률 보조지표는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청년·여성 고용확대 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에 관심이 있고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4. 실업률 상승의 사회구조적인 원인

최근 한국경제에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경제가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4년 기

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국내 기업 1,731곳의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3%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들이 1,000원어치를 팔아 손에 쥐는 돈이 43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조사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4.9%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1.5%로 크게 둔화되었다.



주: 사내유보율 = (당기에 처분된 이익준비금+기타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기타이익잉여금처분액+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처분전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입액) X 100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그림 2-6] 사내유보율 추이

국내 경제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기업투자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며, 향후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내유보분의 비중은 빠른 속도도 증가하였다. 1990년 사내유보율은 83.31%였으나, 2013년에는 93.66%로 10.35%p 증가하였다.

기업의 사내유보율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누적된 이익금을 투자나 고용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잉여금 형태

로 쌓아두기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선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곧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적절한 성장 동력과 투자처를 만들어내지 못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업종이나 영세 상인들의 골목상권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생태계의 혼란을 초래한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은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장하성, 2014).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 것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성은 2013년 산출 기준으로 제조업 49.4%, 서비스업 40.0%, 건설업 5.5% 순이다. 국내 산출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45.2%를 기록했으나 8년 만에 4.2%p 증가했다. 201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제조업 비중은 평균 26.2%이지만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49%에 이른다. 반면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비중은 평균 59.4%를 나타내지만 우리나라는 40.3%에 불과하다.

[표 2-7] 한국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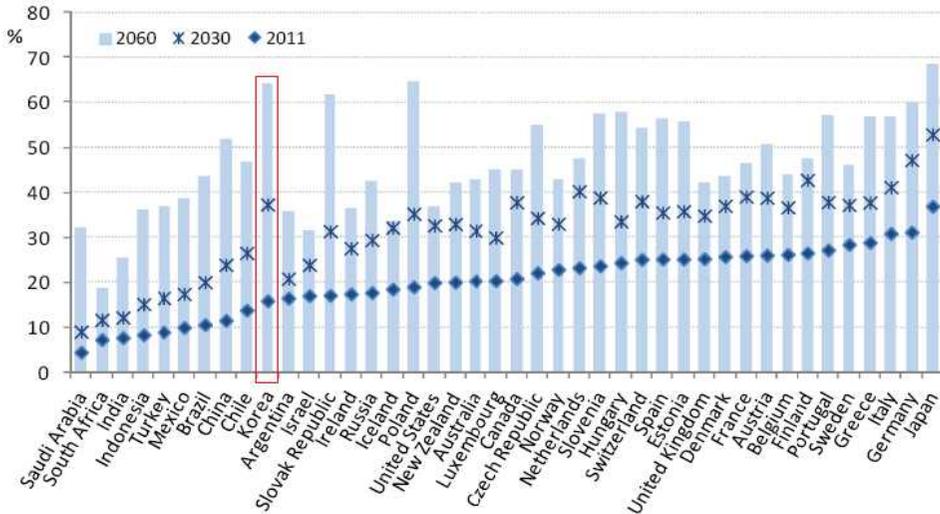
	1995-2011	2011-2030	2030-2060	2011-2060
GDP 성장률(%)	4.6	2.7	1.0	1.6
1인당 GDP 성장률(%)	4.0	2.5	1.4	1.8

자료: OECD,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Nov. 2012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향후 50년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2012)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

장률은 점차 낮아져 206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의 고령화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1년 현재는 10%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화 진행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국내시장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대기업의 국내 투자도 줄어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자료: OECD,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Nov. 2012

[그림 2-7] 국가별 15~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향후 성장률 둔화, 기업의 투자 감소, 인구학적 요인으로 인해 미래의 일자리창출은 더욱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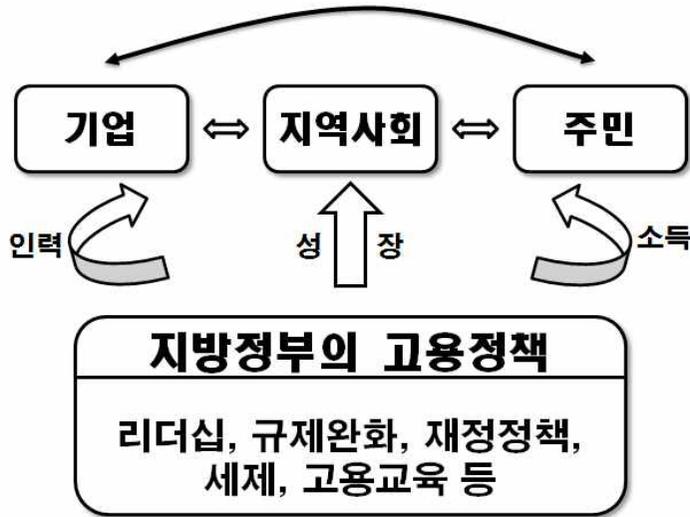
## 5. 지역고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960년대부터 약 50년 간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은 재벌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 이론적 근거는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 이론<sup>3)</sup>이다. 낙수효과란 그릇에 물이 계속 떨어지면 그릇의 양을 초과하는 물은 그릇을 넘쳐서 흘러내리게 되고 흘러넘친 물은 그릇 뿐 아니라 주변도 적시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릇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잘 되어야 투자와 고용이 증대되고 이런 영향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시대에 이런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일자리정책은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투입한 재정에 비해 효과성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고용정책은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고용정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문제 해결·일자리창출·직업능력 개발과 같은 일련의 일자리정책을 주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2015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득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낙수효과(落水效果)가 잘못된 논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소속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p 증가하면 이후 5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08% 감소하는 반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p 증가하면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이 연평균 0.38%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IMF는 밝혔다.



자료: 이종수 (2008)

[그림 2-8] 지역고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상호관계

전병유(2006)는 지역 간 고용성과의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은 산업 구조가 지역별로 불균등하다는 사실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지역별 입지조건과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지역에서 좋은 고용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보다는 지역 단위의 산업간접자본이나 인적자본 등을 확충하는 지역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OECD(2000) 역시 주요 국가들의 고용변동을 살펴본 결과, 지역의 혁신적인 활동, 제품·요소 시장에서의 접근성, 노동력의 질, 지역 제도의 효율성, 경영 및 지역서비스 등 지역의 특수한 개별적인 요인이 지역 간 고용성과의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파악했다.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고용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지역특성에 맞춘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 등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은 단체장의 의지와 추진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서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개수의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는 포상과 함께,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지자체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도 이에 맞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민선6기(2014~2018)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으로 단순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을 넘어, 협력적인 ‘지역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적극적 지역고용정책 및 고용친화적 성장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종수, 2008).

지방고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등 지역 주체들과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현장의 수요에 다가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제안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훈련사업 개발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수원시의 고용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의 취업자 수는 2008년 17만 8천명에 비해 2014년 21만 9천명으로 39.8% 증가하여 전체 산업 중 가장 큰 비중(44.1%)을 차지하였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2014년 11만 명으로 2008년 11만 1천명에 비해 1.4% 감소하였지만 전체 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19.5%)을 차지하였다.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광업·제조업으로 2014년에 9만 8천명으로 2008년에 10만 4천명에 비해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취업자수의 증가률이 높은 산업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39.8%), 전기·운수·통신·금융(18.2%), 건설업(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산업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수의 감소율이 높은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이 2008년 4천명에서 2014년 1천명으로 60.9% 감소하여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광공업(-5.4%), 도소매·음식숙박업(-1.3%) 순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수원시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천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93.7	504.8	515.7	522.2	535.5	541.9	566.8
농업, 임업 및 어업(A)	4.6	5.5	3.2	1.6	2.4	1.8	1.8
광공업(B,C)	104.4	113.0	99.6	91.6	98.6	94.1	98.8
건설업 (F)	44.8	39.5	44.2	44.8	42.7	45.0	47.6
도소매·음식숙박업(G,I)	111.9	111.4	116.1	110.6	110.2	104.4	110.4
전기·운수·통신·금융(D,H,J,K)	49.5	57.2	59.7	71.7	60.5	57.7	58.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E,L~U)	178.6	178.2	193.0	201.9	221.2	238.8	249.7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업 종사자의 64%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제조업 종사자수가 많은 곳은 권선구(9,309명), 장안구(3,319명), 팔달구(2,32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수원시 산업별 종사자수

(단위: 명, %)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농림,임업,어업	247 (0.1)	169 (0.2)	23 (0.0)	- (0.0)	55 (0.0)
광업·제조업	41,590 (10.9)	3,319 (4.5)	9,309 (11.4)	2,324 (2.3)	26,638 (20.9)
건설업	15,575 (4.1)	4,010 (5.5)	4,725 (5.8)	4,496 (4.5)	2,344 (1.8)
서비스업	324,654 (85.0)	65,802 (89.8)	67,913 (82.8)	92,505 (93.1)	98,434 (77.2)

주: 2013년 기준, 괄호 안은 해당산업이 각 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수원시 사업체조사

서비스업은 산업 특성상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수원시의 종사자 규모별 서비스 산업의 사업체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업 사업체에서 소상공인(1~9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9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 전체 59,833개의 사업체 중 55,767개 사업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소기업(10~49인, 소상공인 제외)이 5.5%(35,292개), 중기업(50~299인)이 0.9%(5,859개), 대기업(300인 이상)이 0.1%(399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수원시의 종사자 지위별 서비스업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193,530명으로 5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 50,833명(15.7%), 임시 및 일용노동자 49,850명(15.4%), 기타종사자 21,747명(6.7%), 무급가족 11,333명(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구는 권선구(14,466명)이며, 다음으로는 팔달구(14,456명), 장안구(11,618명), 영통구(10,29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수원시 종사자 지위별 서비스업 취업자 수

(단위: 명, %)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합계	324,654	65,802	67,913	92,505	98,434
자영업자	50,833 (15.7)	11,618 (17.7)	14,466 (21.3)	14,456 (15.6)	10,293 (10.5)
무급가족	11,333 (3.5)	2,973 (4.5)	2,950 (4.3)	3,338 (3.6)	2,072 (2.1)
상용근로자	193,530 (59.6)	35,536 (54.0)	37,911 (55.8)	46,725 (50.5)	73,358 (74.5)
임시 및 일 용	49,850 (15.4)	14,325 (21.8)	8,911 (13.1)	16,442 (17.8)	10,172 (10.3)
기타종사자	21,747 (6.7)	3,989 (6.1)	3,675 (5.4)	11,544 (12.5)	2,539 (2.6)

주: 2013년 기준, 괄호 안은 해당산업이 각 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수원시 사업체조사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을 보기 위해서 수원시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생산액 10억 원당 취업자 수는 28.1명으로 2008년 29.4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계수란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취업자 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것이다. 보통 10억 원 규모의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의 수로 나타내며, 취업계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10억 원 규모의 생산에 더 적은 수의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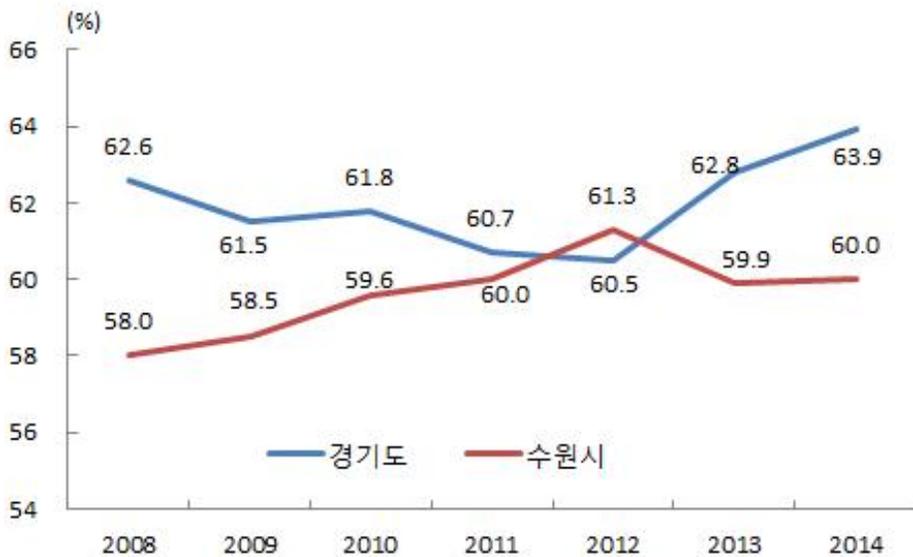
제조업의 경우 2008년 기준 생산액 10억 원당 취업자 수는 46.7명에서 2011년에는 26.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생산액 10억 원당 취업자 수(취업계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창출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제2절 인구적 요인 분석

### 1. 경제활동인구의 특성

#### 1)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경기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하반기 기준 63.9%로 수원시(60.0%)에 비해 3.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62.6%에서 2012년 60.5%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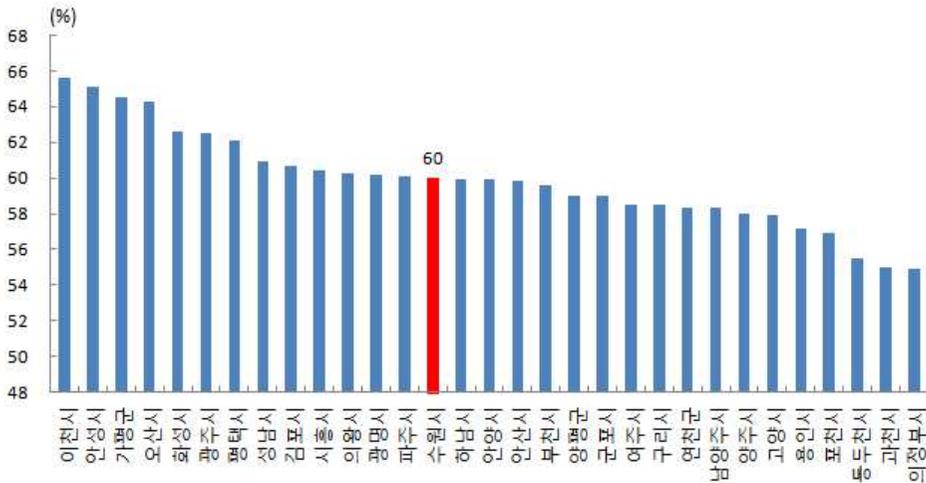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3-4] 경기도, 수원시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경기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U자 형태를 나타낸 반면, 수원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속적으로 상승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의 2014년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이천시(65.6%), 안성시(65.1%), 가평군(64.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의정부시(54.9%), 과천시(55.0%), 동두천시(55.5%)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원시의 2014년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0%로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1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2014년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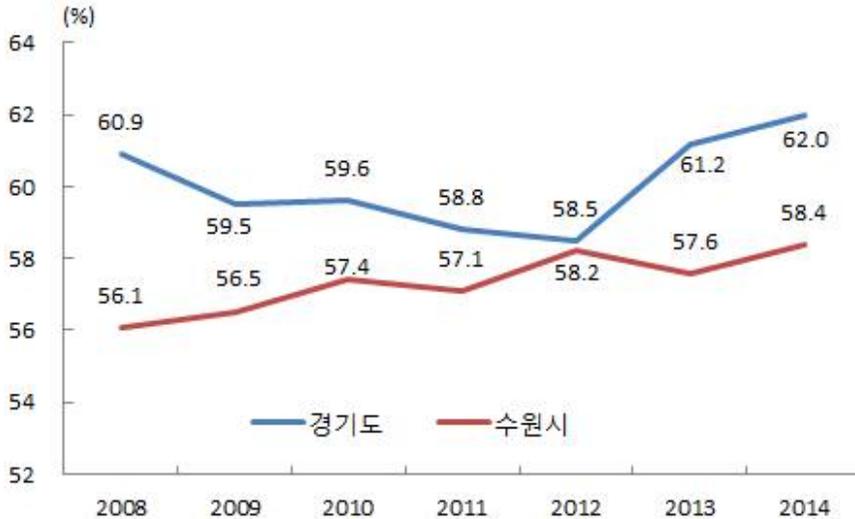
[그림 3-5] 경기도, 수원시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2) 고용률 현황

경기도의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8년 60.9%에서 2012년 58.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2013년에는 61.2%를 기록하며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62.0%를 기록했다.

반면, 수원시의 고용률은 2008년 56.1%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

승세를 보이다가 2012년 58.2%를 기록하며 경기도의 고용률과 가장 근접한 양상을 보인 후에 하락과 상승세를 2014년 하반기 기준 경기도의 고용률은 62.0%로 수원시(58.4%) 보다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수원시의 고용률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수원시의 전반적인 고용률이 경기도 전체의 고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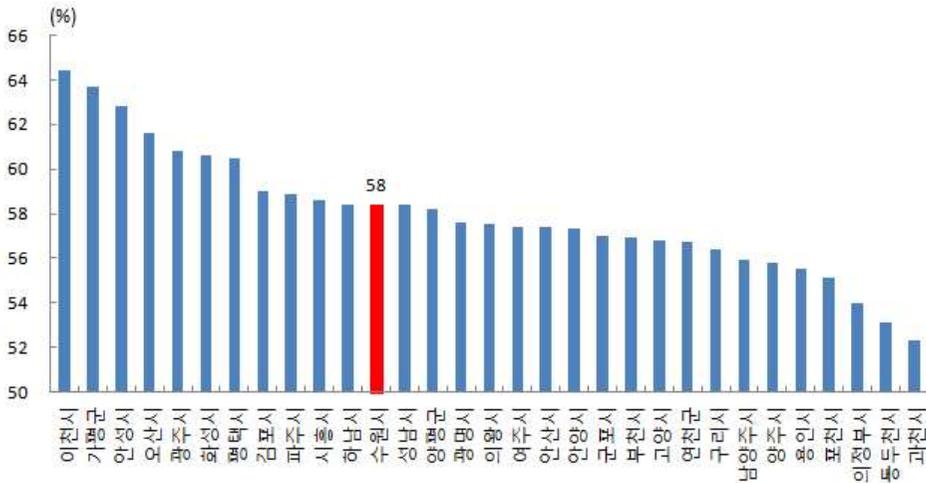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하반기 기준

[그림 3-6] 경기도, 수원시 고용률 비교

[그림 3-7]에서 보듯이 경기도의 고용률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이천시(64.4%), 가평군(63.7%), 안성시(6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과천시(52.3%), 동두천시(53.1%), 의정부시(54.0%)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천시, 가평군, 안성시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인 이들 지역이 경기도 내에서 농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품앗이 형태로 이웃의 농사를 간간히 도와주어도 고용 통계상은 고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높은 고용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원시의 2014년 하반기 고용률은 58.4%로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1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수원시(56만7천명), 성남시(48만3천명), 고양시(47만4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2014년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7] 경기도 시군별 고용률

### 3) 취업자 특성

#### 가. 성별·연령계층별 취업자 특성

수원시 성별 고용통계를 살펴보면, 수원시의 남성 취업자 수는 2014년 34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9천명(2.9%) 증가하였으며, 여성 취업자 수는 2014년 22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5천명(7.2%) 증가하였다. 남성취업자수의 비중은 2014년 60.4%로 전년대비 1%p 감소하였으며, 여성취업자수의 비중은 39.6%로 전년대비 1%p 증가하였다.

[표 3-4] 수원시 성별 고용통계

(단위: 천명, %)

항목	성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세이상인구	남자	431.6	439.8	442.6	456.4	454.3	465.4	480.9
	여자	448.2	453.7	455.6	458.5	465.9	475.5	489.2
경제활동인구	남자	318.0	313.6	318.7	325.2	345.5	343.7	351.2
	여자	192.4	209.3	216.4	223.5	219.0	220.0	231.1
취업자	남자	306.6	302.1	307.9	310.0	329.6	332.7	342.4
	여자	187.0	202.6	207.8	212.2	206.0	209.2	224.4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73.7	71.3	72.0	71.2	76.0	73.9	73.0
	여자	42.9	46.1	47.5	48.7	47.0	46.3	47.2
고용률	남자	71.0	68.7	69.6	67.9	72.5	71.5	71.2
	여자	41.7	44.7	45.6	46.3	44.2	44.0	45.9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반기말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수원시의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세~29세 취업자 수는 2014년 9만 8천명으로 2008년 10만 6천명에 비해 8천명 감소하였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1.7%에서 2014년 17.4%로 4.2%p 감소하였다. 이는 청년취업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인 국내의 취업 상황과 일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30세~49세 취업자 수는 2014년에 30만 9천명으로 2008년 29만 1천명에 비해 1만 8천명 증가하였지만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9%에서 2014년 54.6%로 4.4%p 감소하였다. 이 연령대에 속하는 계층은 주로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경력을 통한 이직 역시 5년 전에 비하여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5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4년 15만 8천명으로 2008년 9만 5천명에 비해 6만 2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9.3%에서 2014년 27.9%로 8.6%p 증가하였다. 5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일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와는 상관 없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5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의 양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5] 수원시 연령계층별 취업자수

(단위: 천 명)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취업자	493.7	504.8	515.7	522.2	535.5	541.9	566.8
연령계층별(15~29세)	106.9	107.6	104.4	103.2	94.6	92.9	98.8
연령계층별(30~49세)	291.5	292.4	293.1	294.0	299.4	299.4	309.7
연령계층별(50세 이상)	95.3	104.8	118.3	124.9	141.5	149.6	158.2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표 3-6] 경기도 사군별 연령계층별 남성 고용률 비교

(단위: %)

순위	시·군	15 - 29세	시·군	30 - 49세	시·군	50 - 64세
1	과천시	48.0	여주시	95.3	이천시	89.1
2	오산시	46.5	화성시	95.1	김포시	88.2
3	평택시	44.3	가평군	94.3	고양시	88.1
4	광주시	42.8	양평군	94.3	의왕시	86.8
5	이천시	42.1	용인시	94.1	가평군	86.7
6	안양시	42.0	군포시	94.0	평택시	86.1
7	양주시	41.5	수원시	93.6	광주시	86.0
8	하남시	40.8	이천시	93.4	시흥시	85.9
9	화성시	40.7	고양시	93.3	성남시	84.5
10	여주시	39.8	의왕시	93.3	오산시	84.3
11	동두천시	39.2	광주시	93.2	군포시	84.3
12	남양주시	39.0	오산시	93.1	구리시	84.2
13	안성시	38.5	안산시	92.8	하남시	84.1
14	수원시	37.5	안양시	92.5	연천군	83.7
15	군포시	37.2	평택시	92.4	안성시	83.1
16	의정부시	36.9	구리시	92.3	양주시	83.1
17	김포시	36.7	과천시	92.1	광명시	82.7
18	성남시	36.6	안성시	91.7	안산시	82.6
19	광명시	36.4	김포시	91.5	여주시	82.6
20	의왕시	36.3	하남시	91.4	과천시	81.4

21	안산시	36.0	성남시	91.2	화성시	81.3
22	부천시	35.6	의정부시	91.2	남양주시	81.0
23	시흥시	35.6	양주시	91.1	부천시	80.6
24	구리시	35.0	광명시	90.9	안양시	80.1
25	연천군	34.4	파주시	90.3	양평군	79.9
26	포천시	34.2	시흥시	90.2	수원시	79.8
27	가평군	33.1	남양주시	89.6	용인시	78.7
28	용인시	31.7	부천시	88.4	의정부시	78.3
29	고양시	30.5	연천군	87.9	과천시	77.8
30	양평군	30.2	포천시	87.8	포천시	77.4
31	과천시	25.5	동두천시	87.5	동두천시	71.8

주: 2014년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수원시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하반기 기준으로 남성은 73%, 여성은 47.2%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오산시(79.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화성시(78.9%), 이천시(77.9%) 등의 순이다.

오산시에는 LG 이노텍 오산공장, SK 케미컬 오산공장, 아모레 퍼시픽 오산공장 등 대기업들의 공장이 오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선상에서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이천시에는 하이닉스의 공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도시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1번째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의 15~29세 남성고용률은 37.5%로 경기도 내에서 1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30~49세 남성고용률은 93.6%로 경기도 내에서 7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나, 50~60세 남성고용률이 79.8%로 경기도 내에서 6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50~60세 남성고용률 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가평군(55.3%), 안성시(53.8%), 이천시(5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9위로 나타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경기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수원시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2008년 30.8%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25.8%를 나타냄으로써 그 간극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주: 2014년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8] 수원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표 3-7] 경기도 시·군별 연령계층별 여성고용률 비교 (단위: %)

순위	시·군	15 - 29세	시·군	30 - 49세	시·군	50 - 64세
1	성남시	45.3	이천시	68.3	가평군	71.0
2	오산시	43.9	가평군	67.0	안성시	64.6
3	광명시	43.8	양평군	62.6	연천군	61.8
4	광주시	42.7	안성시	60.9	이천시	61.1
5	수원시	42.3	연천군	60.3	평택시	58.3

6	의정부시	42.0	성남시	58.7	양평군	57.0
7	동두천시	41.1	포천시	58.5	여주시	56.6
8	가평군	41.0	과천시	58.1	파주시	56.1
9	군포시	40.4	부천시	57.8	시흥시	55.3
10	이천시	40.4	안양시	56.8	포천시	55.2
11	안양시	40.0	하남시	56.4	화성시	53.1
12	안성시	39.0	광주시	56.3	고양시	52.6
13	용인시	38.5	고양시	55.9	하남시	52.4
14	부천시	38.3	동두천시	55.8	수원시	52.1
15	구리시	38.3	구리시	55.2	광주시	50.8
16	파주시	38.3	의왕시	55.1	의왕시	50.7
17	고양시	38.2	광명시	55.0	김포시	50.3
18	안산시	38.1	과천시	54.6	군포시	50.2
19	김포시	36.3	평택시	54.2	안산시	49.6
20	양주시	36.1	수원시	53.9	오산시	48.6
21	남양주시	35.9	남양주시	53.5	용인시	48.6
22	양평군	35.8	시흥시	53.4	광명시	48.5
23	하남시	35.6	양주시	53.2	부천시	48.3
24	연천군	35.2	여주시	53.2	동두천시	48.1
25	화성시	34.9	안산시	52.8	양주시	47.5
26	평택시	34.8	오산시	52.2	성남시	47.3
27	의왕시	34.8	의정부시	51.8	남양주시	46.6
28	포천시	34.3	김포시	50.8	의정부시	46.0
29	과천시	34.1	용인시	49.5	안양시	45.4
30	시흥시	33.1	군포시	49.1	과천시	45.2
31	여주시	31.5	화성시	48.4	구리시	45.2

주: 2014년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연령계층별로 여성고용률을 살펴보면 15-29세의 여성고용률은 42.3%로 경기도 내 지자체 중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50~64세 여성고용률은 52.1%로 경기도 내 지자체 중 14번째에 해당하였다. 반면 30세~49세 여성고용률은 53.9%로 경기도 내 지자체 중 20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수원시의 성별 고용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남성고용 취약계층은

50~60세로, 여성고용 취약계층은 30세~49세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은퇴자와 여성경력단절자들의 연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원시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남녀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 재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종사자의 지위별로 구분한 수원시의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수는 2014년 46만 6천명으로 2008년에 38만 8천명에 비해 20.1%p 증가하였다. 전체 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8.7%에서 2014년 82.4%로 3.6%p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14년 33만 7천명으로 2008년도 26만 7천명에 비해 26.2%p 증가하였다. 전체 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4.2%에서 2014년 59.5%로 5.4%p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에 상용근로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만들어지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원시로 꾸준히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근로자수는 2014년 12만 9천명으로 2008년 12만 1천명에 비해 6.5%p 증가하였다. 반면, 전체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24.6%에서 2014년 22.8%로 1.8%p 감소하였다.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된 비임금근로자는 2014년 10만 명으로 2008년 10만 4천명에 비해 4.7%p 감소하였다. 전체 근로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21.2%에서 2014년 17.6%로 3.6%p 감소하였다.

[표 3-8] 2008, 2014년도 수원시 종사자 지위별 증감 비교

근로자 구분	전체 근로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양질의 일자리 방향						
2008, 2014년 수원시 종사자 지위별 증감 비교	전체 근로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수: 20.1%p 증가		비중: 3.6%p 증가		수	비중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 26.2%p 증가	비중: 5.4%p 증가	수: 6.5%p 증가	비중: 1.8%p 감소	4.7%p 감소	3.6%p 감소	

[표 3-9] 수원시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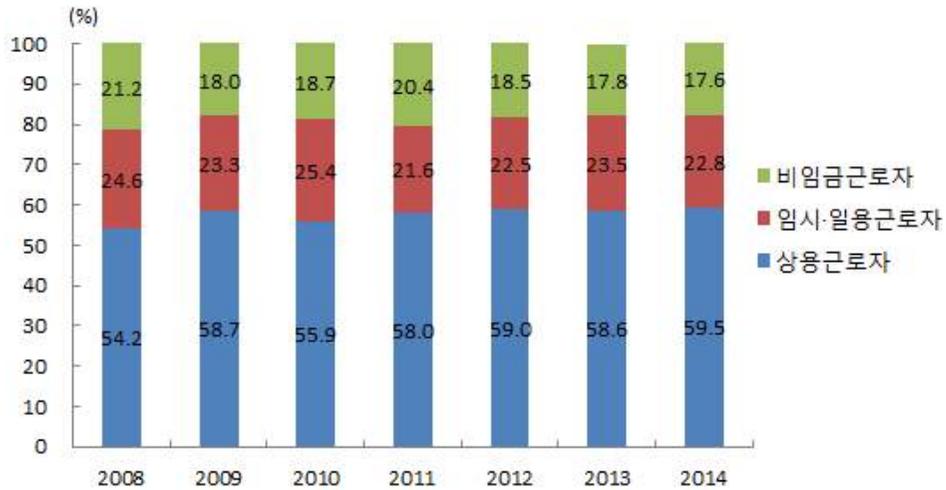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종사상지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93.7	504.8	515.7	522.2	535.5	541.9	566.8
임금근로자	388.7	413.8	419.2	415.9	436.8	445.5	466.8
- 상용근로자	267.4	296.1	288.4	303.0	316.1	317.8	337.5
- 임시·일용근 로자	121.4	117.8	130.8	112.9	120.7	127.6	129.3
비임금근로자	104.9	90.9	96.6	106.3	98.8	96.4	100.0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종사자 지위별 근로자수 비중을 통해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원시의 전체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수의 비중은 2014년 하반기 기준 82.4%로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2번째로 높다. 이들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72.3%로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 17번째로,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27.7%로 경기도 내 지자체 중 15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17.6%로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는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경영하는 자영업자, 유급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유형이 해당된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을수록 해당 지자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수원시의 일자리 질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주: 2014년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9] 수원시 종사자 지위별 근로자수 비중

수원시의 종사자 지위별 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54.2%를 기록한 이후 2014년에는 59.5%를 기록하며 5.3%p 증가하였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24.6%에서 2014년 22.8%로 1.8%p 감소하였다.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2008년 21.2%에서 2014년 17.6%p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종사자 직업별 취업자

수원시 직업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2008년 4만 4천명에서 2014년 6만 1천명으로 3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008년 14만 명에서 2014년 17만 명으로 22.1%p 증가하였다.

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2008년 3,800명에서 2014년 3,100명으로 18.4%p 감소하였으며,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도 2008년 10만 6천명에서 2014년 10만 1천명으로 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수원시 직업별 취업자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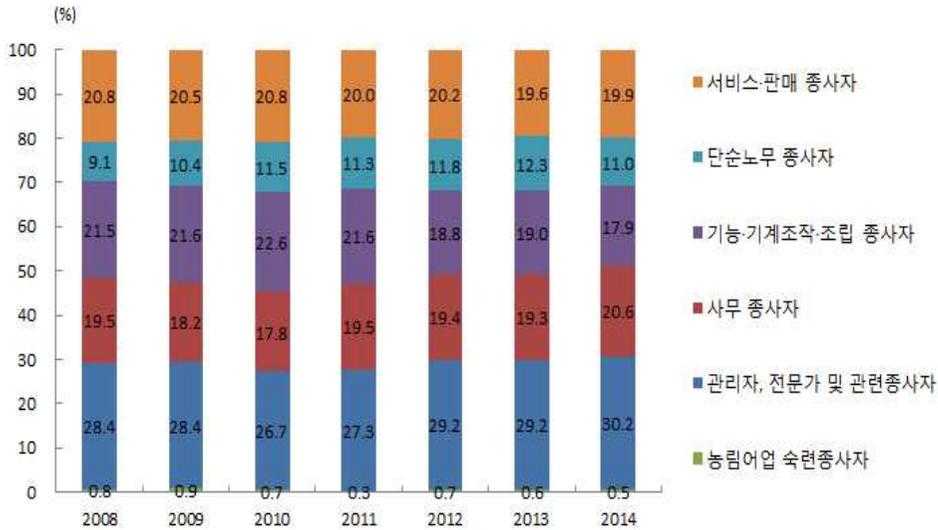
직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93.7	504.8	515.7	522.2	535.5	541.9	566.8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0.0	143.5	137.8	142.7	156.1	158.1	170.9
사무 종사자	96.4	91.7	91.7	101.8	103.7	104.6	116.7
서비스·판매 종사자	102.5	103.3	107.4	104.2	108.1	106.4	112.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8	4.7	3.4	1.6	3.7	3.5	3.1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06.2	108.9	116.3	112.7	100.9	102.8	101.2
단순노무 종사자	44.8	52.5	59.2	59.2	63.0	66.6	62.2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전체 근로자 중 각 직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전체 근로자 중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은 30.1%로 과천시(47.9%), 용인시(35.2%), 군포시(30.5%)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전체 근로자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직업은 사무종사자

(20.6%)로 경기도 내 지자체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19.9%로 16번째로 높았다. 비중이 낮은 직업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17.9%), 단순노무종사자(1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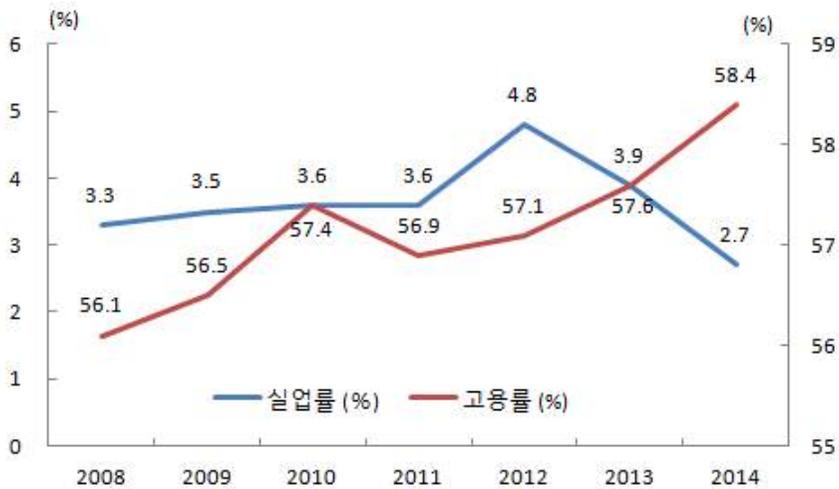
[그림 3-10] 수원시 종사자 직업별 비중

연도별로 수원시 종사자 직업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은 2008년 28.4%에서 2014년 30.2%로 1.8%p 증가하였으며, 사무종사자의 비중도 2008년 19.5%에서 2014년 20.6%로 1.1%p 증가하였다. 또한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도 2008년 9.1%에서 2014년 11%로 1.9%p 증가하였다.

종사자의 직업별 비중이 감소한 직업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로 2008년 21.5%에서 2014년 17.9%로 3.6%p 감소하였으며, 서비스·판매 종사자도 2008년 20.8%에서 2014년 19.9%로 0.9%p 감소하였다.

#### 4) 실업률 현황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의 평균 실업률은 3.6%, 고용률은 57.1%이다. 수원시의 실업률은 2013년 3.9%에서 2014년 2.7%로 1.2%p 감소한 반면, 고용률은 57.6%에서 58.4%로 0.8%p 증가하였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12년으로 4.8%로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고용률은 2008년 56.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반기말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3-11] 수원시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경기도의 실업률은 2008년 이후 큰 폭의 변동 없이 지속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하반기 기준 경기도의 실업률은 2.9%로 2008년 2.8%에 비해 0.1%p 증가하였다. 수원시의 경우 2012년에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하반기 실업률은 2.7%로 나타났다.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3-12] 경기도, 수원시 실업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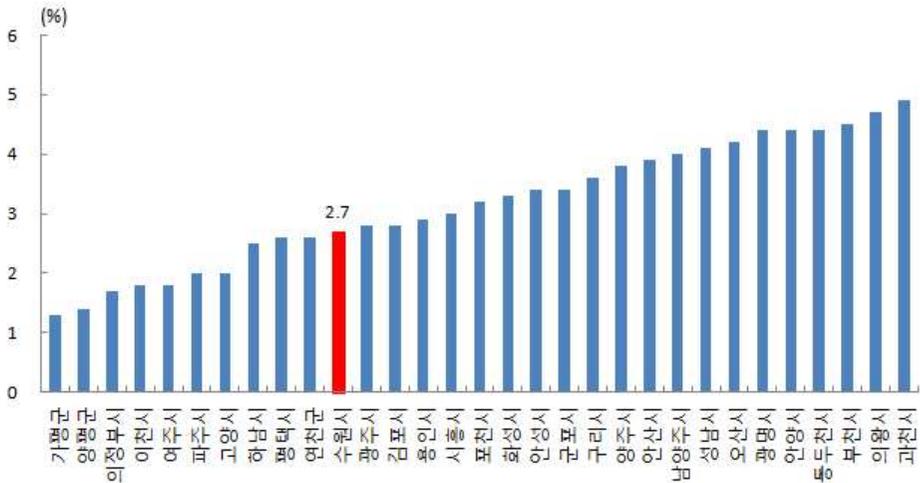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과천시(4.9%), 의왕시(4.7%), 부천시(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2014년 하반기 실업률은 2.7%로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11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는 성남시(2만 명), 부천시(1만9천명), 수원시(1만5천명)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수원시의 실업률은 2012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 수원시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인근의 다른 시에 비해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수원시에서 그 원인을 조사하던 중 수원시의 실업률 표본추출지역이 고시촌이 많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수원시는 경인지방통계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경인지방통계청은 수원시의 이의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표본추출지역을 일부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수원시의 실업률 감소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런 해석이 사실이라면 여러 도시의 실업률 통계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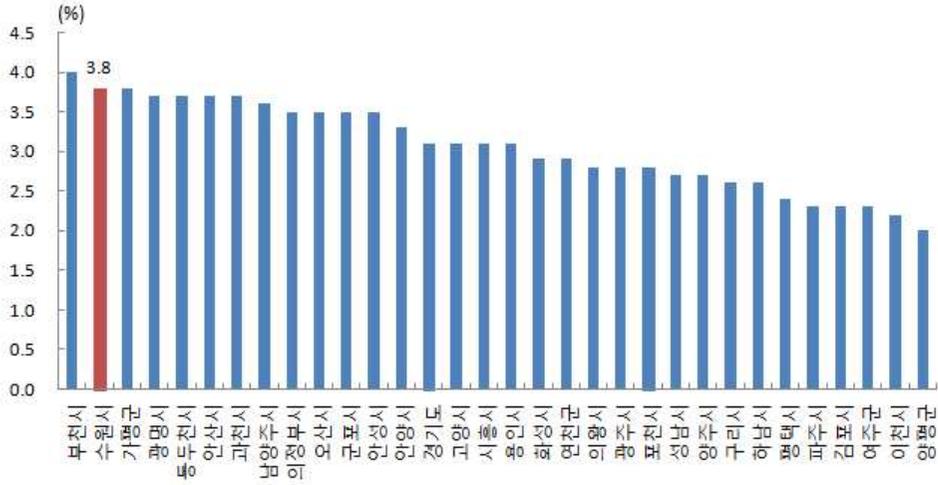


주: 2014년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13] 경기도 사군별 실업률

## 2. 노동이동현황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4년 4월 기준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285천명으로 성남시(301천명)에 이어 경기도에서 2번째로 종사자수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주: 입직률은 “입직자수/([조사기준월 + 조사기준전월]/2)×100”으로 계산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14] 경기도 시군별 입직률

[표 3-11] 시군별 종사자수 및 노동이동 현황 (단위 : 천명, %, %p)

시도 시군구	'13.10월 <sup>P</sup>				'14.10월 <sup>P</sup>							
	종사자	빈일자 리율	입직률	이직률	종사자		빈일자리율		입직률		이직률	
					증감률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경기도	3,409	1.7	3.1	3.1	3,420	(0.3)	2.0	(0.3)	2.8	(-0.3)	2.9	(-0.2)
수원시	309	1.7	4.3	4.2	306	(-1.1)	1.8	(0.1)	3.9	(-0.4)	4.0	(-0.2)
성남시	322	1.5	3.0	2.8	322	(0.0)	1.9	(0.4)	2.8	(-0.1)	3.1	(0.3)
의정부시	79	1.6	2.6	2.8	80	(1.2)	2.5	(1.0)	3.0	(0.5)	2.6	(-0.2)
안양시	184	1.4	3.1	3.0	185	(0.3)	1.8	(0.4)	2.9	(-0.2)	3.2	(0.3)
부천시	206	1.2	3.0	3.4	208	(0.9)	1.8	(0.6)	2.5	(-0.4)	2.9	(-0.6)
광명시	62	1.3	2.8	2.6	63	(1.0)	1.3	(-0.0)	2.9	(0.1)	3.2	(0.6)
평택시	155	1.2	2.9	2.8	156	(0.7)	2.1	(0.9)	2.0	(-0.8)	2.2	(-0.6)
동두천시	19	2.0	2.7	2.2	19	(1.2)	2.2	(0.2)	2.8	(0.1)	2.2	(-0.0)
안산시	249	1.7	2.4	2.4	251	(0.7)	1.8	(0.1)	2.2	(-0.1)	2.4	(0.1)
고양시	200	1.3	3.7	2.7	202	(0.8)	1.5	(0.2)	3.5	(-0.2)	3.2	(0.5)
과천시	30	0.9	2.2	2.0	27	(-10.6)	0.9	(0.0)	1.6	(-0.6)	2.0	(0.0)
구리시	42	1.7	1.8	2.3	42	(0.3)	1.1	(-0.5)	1.8	(-0.0)	2.1	(-0.2)
남양주시	91	1.6	3.9	3.2	92	(1.8)	2.2	(0.7)	2.8	(-1.1)	2.9	(-0.3)
오산시	41	3.6	3.8	4.4	42	(1.5)	2.4	(-1.3)	2.1	(-1.7)	2.3	(-2.2)

시흥시	136	1.9	2.1	2.2	136	(0.4)	2.5	(0.6)	2.1	(0.0)	2.1	(-0.1)
군포시	78	1.3	3.2	2.7	77	(-0.2)	1.7	(0.4)	3.3	(0.1)	3.1	(0.4)
의왕시	33	1.4	2.4	2.9	33	(1.0)	1.1	(-0.3)	2.9	(0.5)	3.2	(0.3)
하남시	43	2.1	3.0	2.4	43	(0.4)	2.5	(0.4)	2.7	(-0.3)	2.7	(0.3)
용인시	220	1.9	3.5	4.9	220	(0.4)	1.9	(-0.0)	3.8	(0.3)	3.0	(-1.9)
과주시	122	1.3	1.6	1.9	122	(0.7)	1.0	(-0.4)	2.2	(0.6)	2.5	(0.6)
이천시	81	2.3	1.8	2.6	81	(1.1)	2.0	(-0.3)	1.6	(-0.2)	2.1	(-0.5)
안성시	69	1.7	2.9	3.1	70	(0.6)	2.2	(0.4)	2.4	(-0.5)	2.3	(-0.8)
김포시	94	2.1	3.4	2.7	94	(0.3)	3.1	(1.1)	3.0	(-0.4)	3.1	(0.4)
화성시	279	2.2	3.7	3.8	279	(0.0)	2.2	(0.1)	2.3	(-1.4)	2.8	(-1.0)
광주시	82	2.5	4.2	3.2	83	(0.9)	3.1	(0.5)	3.7	(-0.5)	3.2	(0.0)
양주시	56	2.0	2.6	3.6	56	(0.7)	2.6	(0.7)	1.8	(-0.8)	2.1	(-1.5)
포천시	60	1.6	3.1	2.7	61	(0.3)	2.2	(0.6)	2.1	(-0.9)	3.5	(0.8)
여주시	28	2.2	1.9	1.6	28	(1.1)	1.9	(-0.2)	2.8	(0.8)	2.7	(1.0)
연천군	9	2.8	2.1	3.9	9	(1.2)	2.0	(-0.7)	3.1	(1.0)	1.9	(-2.0)
가평군	14	2.7	4.5	3.4	14	(1.7)	1.1	(-1.6)	2.7	(-1.8)	2.3	(-1.1)
양평군	17	2.8	3.1	2.3	17	(2.0)	1.9	(-0.9)	2.9	(-0.2)	2.9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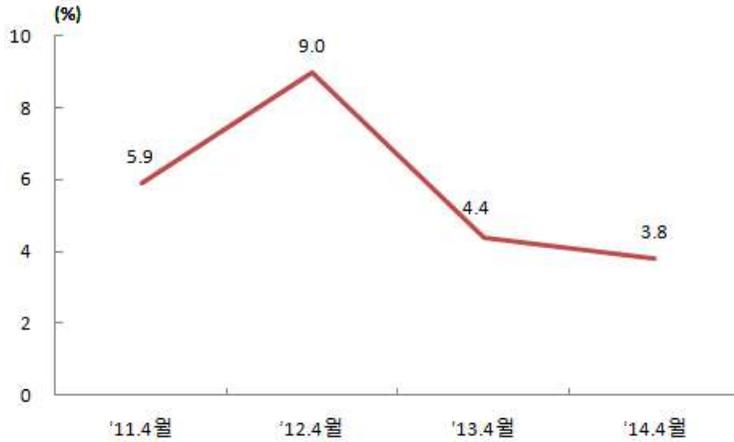
주 : P: 잠정치, ( ): 전년동월대비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입직률<sup>4)</sup>과 이직률<sup>5)</sup>을 통해 수원시의 노동이동을 살펴보면 수원시의 입직률은 3.8%로 경기도에서 부천시(4.0%)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이직률도 경기도에서 8번째로 높아(3.2%) 노동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입직률은 2011년 4월 기준 5.9%에서 2012년 4월 기준 9.0%로 3.1%p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수원시의 입직률은 3.8%를 기록함으로써 전년 동기에 비해 0.6%p 감소하였다.

4) 입직자수/ ([조사기준월 + 조사기준전월]/2)×100

5) 이직자수/ ([조사기준월 + 조사기준전월]/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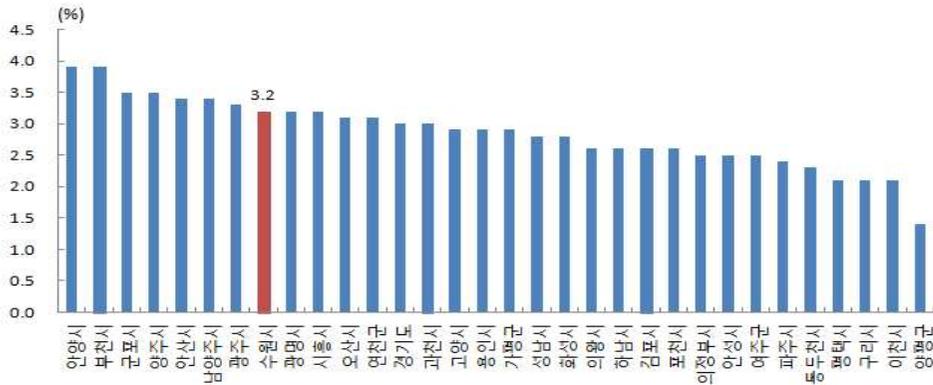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15] 수원시 이직률 추이

경기도의 시·군별 이직률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8번째로 이직률이 높은 도시로 2014년 4월 기준 3.2%로 나타났다. 안양시와 부천시 3.9%로 이직률이 가장 높았으며, 양평군이 1.4%로 가장 낮은 이직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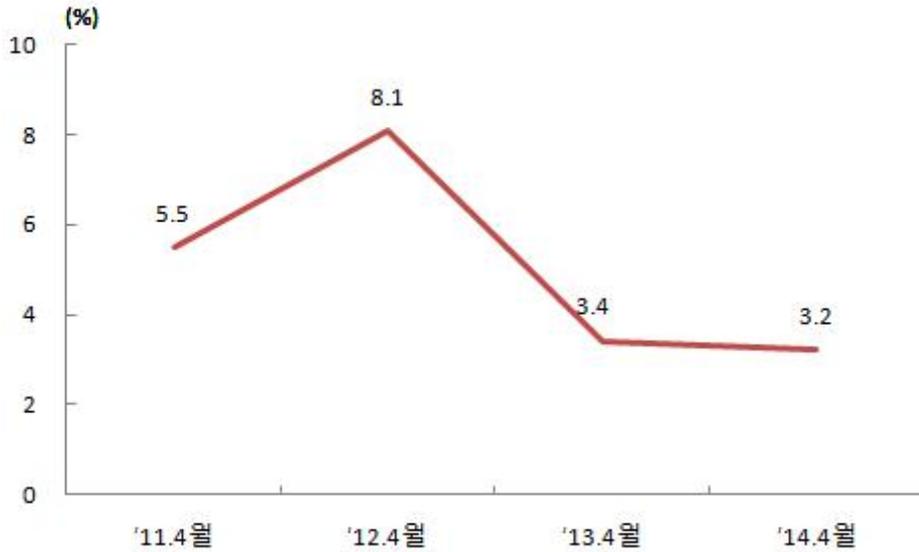
2011년 4월 기준 수원시의 이직률은 5.5%에서 2012년 8.1%로 이직률이 2.4%p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2014년 4월 기준 이직률은 3.2%로 전년 동기에 비해 0.2%p 감소하였다.



주: 이직률은 “이직자수 / ((조사기준월 + 조사기준전월)/2) × 100”으로 계산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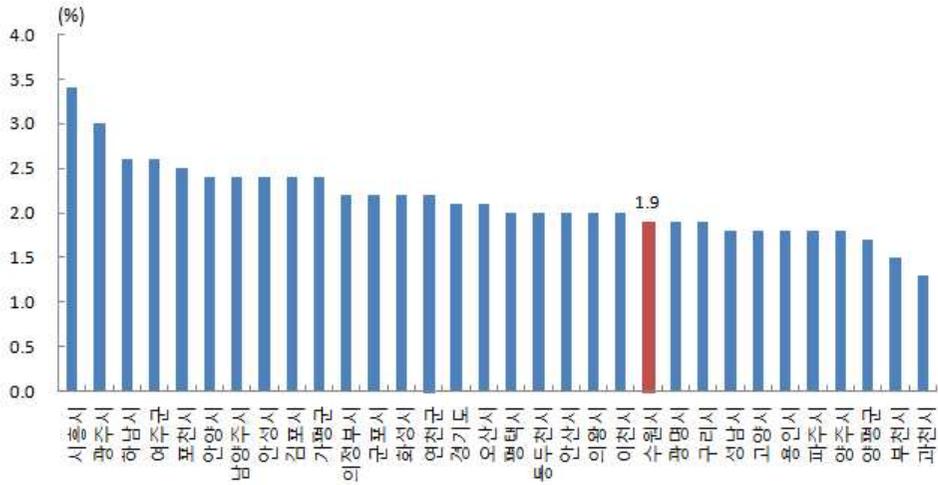
[그림 3-16] 경기도 시·군별 이직률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17] 수원시 이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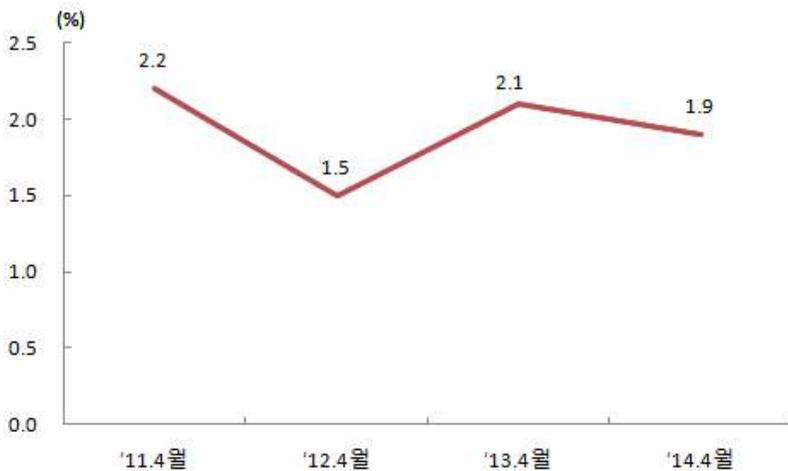
2014년 4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비어 있거나 비어있지 않더라도, 30일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빈 일자리의 비율은 수원시는 1.9%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에서 11번째로 빈 일자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 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시흥시(3.4%)로 나타났다으며, 빈 일자리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과천시(1.3%)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18] 경기도 빈일자리율 비교

수원시의 빈일자리 비율을 추이별로 살펴보면 2011년 4월 기준 2.2%에서 2012년 1.5%로 0.7%p 감소하였다가 이후 상승하여 약 2%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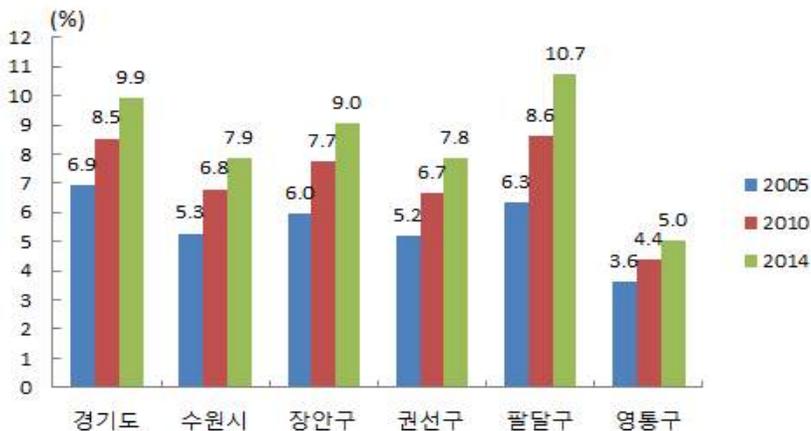
[그림 3-19] 경기도 빈일자리율 비교

### 3.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 1) 고령화 사회비율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 14% 미만이면, 이 사회를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라고 부른다. 만약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 ~ 20% 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된다.

수원시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4년 기준 7.9%를 기록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3-20]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

수원시의 각 구별로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팔달구(10.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장안구(9%), 권선구(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통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에 불과하여 아직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고령화 될 경우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중장년 인력에 대한 수요창출과 중장년 인력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2) 성별·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수원시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기준 387,8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남성은 129,700명, 여성은 258,100명으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가 남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성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255,800명에서 2014년 258,100명으로 0.9%p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113,600명에서 2014년 129,700명으로 14.2%p 급증하였다.

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도에 5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는 5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2008년 119,100명에서 2014년 142,600명으로 19.7%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2014년은 소위 베이붐세대라고 불리는 연령계층이 집중적으로 은퇴를 맞이한 첫해이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기준으로 수원시의 5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142,600명,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141,600명이다.

[표 3-12] 수원시 성별·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경제활동인구	369.4	370.7	363.1	366.3	355.8	377.2	387.8
- 성별(남자)	113.6	126.2	123.9	131.2	108.8	121.7	129.7
- 성별(여자)	255.8	244.5	239.2	235.0	246.9	255.5	258.1
- 연령계층별(15~29세)	141.9	141.4	140.7	134.2	135.2	144.9	141.6
- 연령계층별(30~49세)	108.3	104.9	101.3	99.9	99.4	104.1	103.7
- 연령계층별(50세 이상)	119.1	124.3	121.1	132.2	121.1	128.3	142.6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 내 타지자체들과 비교해보면, 수원시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9번째로 높은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0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남성대비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경기도 시군별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시·군	성별(남자)	시·군	성별(여자)
가평군	36.7	화성시	70.9
포천시	36.5	김포시	70.6
양평군	35.8	오산시	70.0
연천군	35.7	평택시	69.3
동두천시	35.5	군포시	69.2
안성시	34.9	남양주시	68.8
과천시	34.8	여주시	68.7
의정부시	34.2	의왕시	68.4
수원시	33.4	안양시	68.3
시흥시	33.4	양주시	68.2
부천시	33.4	광명시	68.1
고양시	33.2	용인시	68.1
안산시	32.7	이천시	68.0
구리시	32.6	파주시	68.0
성남시	32.5	하남시	68.0
하남시	32.0	광주시	67.9
광주시	32.0	성남시	67.5
이천시	32.0	구리시	67.4
파주시	32.0	안산시	67.3

용인시	31.9	고양시	66.8
광명시	31.9	부천시	66.6
양주시	31.8	수원시	66.6
안양시	31.7	시흥시	66.5
의왕시	31.6	의정부시	65.8
여주시	31.3	과천시	65.2
남양주시	31.2	안성시	65.1
군포시	30.8	동두천시	64.5
평택시	30.7	연천군	64.3
오산시	30.0	양평군	63.9
김포시	29.4	포천시	63.5
화성시	29.1	가평군	63.3

주: 2014년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중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안산시, 시흥시, 이천시에 이어 4번째로 높고, 30~49세 비중은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50세 이상이 비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청년실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및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30~49세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경기도 내에서 9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연령대의 여성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14] 경기도 사군별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시·군	15~29세	시·군	30~49세	시·군	50세 이상
안산시	38.8	오산시	32.6	양평군	60.6
시흥시	38.5	화성시	31.9	연천군	59.1
이천시	37.1	김포시	29.8	가평군	57.6
수원시	36.5	시흥시	28.5	동두천시	53.1
안성시	36.3	용인시	28.0	포천시	52.4
고양시	35.6	군포시	27.6	여주시	51.5
과천시	35.6	평택시	27.0	양주시	48.1
부천시	35.6	과천시	26.8	의정부시	47.0
의왕시	34.8	수원시	26.7	하남시	46.9
평택시	33.9	남양주시	26.2	과천시	45.1
화성시	32.9	안산시	25.9	광주시	44.7
안양시	32.6	광주시	25.4	남양주시	44.3
성남시	32.6	광명시	25.2	안양시	44.3

오산시	32.6	구리시	24.6	성남시	43.8
구리시	32.6	양주시	24.0	광명시	43.0
군포시	32.6	고양시	23.9	과주시	43.0
광명시	31.8	성남시	23.5	구리시	42.8
용인시	31.3	의정부시	23.5	이천시	42.1
김포시	30.7	의왕시	23.4	의왕시	41.6
과주시	30.2	부천시	23.2	부천시	41.2
하남시	30.2	안양시	23.1	안성시	40.9
광주시	29.9	하남시	22.9	용인시	40.7
의정부시	29.5	안성시	22.6	고양시	40.5
남양주시	29.5	동두천시	21.2	군포시	39.8
포천시	29.0	이천시	20.6	김포시	39.6
여주시	28.7	여주시	19.7	평택시	39.1
가평군	28.2	과천시	19.3	수원시	36.8
양주시	27.9	포천시	18.8	화성시	35.3
동두천시	25.7	연천군	16.2	안산시	35.3
연천군	24.7	양평군	14.9	오산시	34.7
양평군	24.5	가평군	14.1	시흥시	33.0

주: 2014년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3)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활동 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육아, 가사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고 있는 인구가 178,4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학, 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120,3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기타로 분류된 비경제활동인구는 46,800명, 나이가 연로하여 구직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인구는 42,300명으로 나타났다.

[표 3-15] 수원시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경제활동인구	369.4	370.7	363.1	366.3	355.8	377.2	387.8
육아, 가사	168.1	180.0	162.1	154.3	166.5	165.8	178.4
재학, 진학준비	110.8	109.7	108.9	115.1	110.3	117.5	120.3
연로	42.5	29.2	41.0	38.7	33.9	43.0	42.3
기타	48.0	51.8	51.2	58.1	45.0	50.9	46.8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수원시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학, 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2008년 110,800명에서 2014년 120,300명으로 8.6% 증가하였으며, 육아,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도 해당기간동안 6.1% 증가하였다. 반면 연로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은 해당기간 동안 0.5% 감소하였으며, 기타로 분류된 비경제활동인구도 2.5% 감소하였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과 비교해보면, 수원시의 경우 재학, 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과천시, 안산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수원시는 15번째로 높다. 반면 연로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비중과 기타 분류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경기도 내 지자체들 중에서 5번째로 낮았다.

[표 3-16] 경기도 시군별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시·군	육아, 가사	시·군	재학, 진학 준비	시·군	연로	시·군	기타
오산시	52.9	과천시	32.2	양평군	24.2	포천시	21.3
화성시	52.4	안산시	31.6	여주시	20.0	부천시	19.7
군포시	51.7	수원시	31.0	가평군	18.6	동두천시	18.2
연천군	50.6	시흥시	29.8	동두천시	17.3	연천군	17.5
용인시	49.7	안성시	29.7	안성시	17.2	의정부시	17.5
양주시	49.3	이천시	29.4	광명시	16.6	과주시	17.3
안양시	48.5	의왕시	29.2	이천시	16.5	시흥시	17.1
남양주시	48.5	고양시	28.7	과천시	15.9	하남시	17.1
평택시	47.9	용인시	27.4	광주시	15.2	안산시	16.8
김포시	47.7	성남시	27.3	연천군	14.9	가평군	16.4
광주시	47.6	구리시	26.6	성남시	14.6	구리시	16.2
하남시	47.3	군포시	26.4	포천시	14.5	남양주시	16.1
의왕시	47.3	부천시	26.2	양주시	14.2	이천시	15.8
과주시	46.6	안양시	26.0	평택시	13.9	양주시	15.1

수원시	46.0	화성시	25.8	부천시	13.3	김포시	15.0
구리시	45.8	오산시	25.8	고양시	13.2	광명시	15.0
의정부시	45.4	광명시	25.7	의정부시	12.8	여주시	14.9
성남시	45.4	평택시	25.7	의왕시	12.6	오산시	14.4
고양시	45.2	김포시	25.0	남양주시	12.6	화성시	14.2
동두천시	44.7	과천시	24.3	용인시	12.4	안양시	14.0
여주시	44.4	의정부시	24.2	김포시	12.3	안성시	13.9
양평군	43.7	하남시	23.5	하남시	12.0	광주시	13.9
안산시	43.4	광주시	23.2	시흥시	11.9	양평군	13.8
광명시	42.7	남양주시	22.7	과천시	11.8	고양시	12.9
가평군	42.4	가평군	22.6	안양시	11.5	성남시	12.7
포천시	42.0	포천시	22.4	구리시	11.2	평택시	12.5
시흥시	41.1	양주시	21.4	수원시	10.9	수원시	12.1
부천시	40.9	여주시	21.0	군포시	10.1	군포시	11.9
과천시	40.5	동두천시	20.1	안산시	8.1	과천시	11.4
안성시	39.2	양평군	18.0	화성시	7.7	의왕시	11.1
이천시	38.3	연천군	16.9	오산시	7.2	용인시	10.5

주: 2014년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4)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고졸학력을 가지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57,5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비경제활동인구 147,500명,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82,9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수원시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대졸이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69.4	370.7	363.1	366.3	355.8	377.2	387.8
중졸이하	149.8	152.2	148.1	147.1	145.6	144.4	147.5
고졸	140.5	149.8	145.1	148.7	141.7	145.5	157.5
대졸이상	79.1	68.7	69.9	70.4	68.5	87.2	82.9

주: 2008~2010는 연간 기준, 2011~2012년은 4분기말 기준, 2013~2014년은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졸 비경제활동인구가 2008년 140,500명에서 2014년 157,500명으로 12.1%p 급증하였다.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도 같은 기간에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졸이하 비경제활동인구는 2008년에 비해 1.5%p 감소하였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들과 비교하면 수원시는 고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자체들 중에서 9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13번째로 높았다. 반면 중졸이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지자체중 20번째로 나타나, 중졸이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8] 경기도 시군별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시·군	중졸이하	시·군	고졸	시·군	대졸이상
연천군	61.7	시흥시	48.2	용인시	39.0
가평군	59.9	안산시	43.9	과천시	33.7
여주시	55.6	부천시	43.0	고양시	29.4
이천시	52.6	화성시	41.6	성남시	27.7
포천시	52.5	광주시	41.2	의왕시	27.5
양평군	52.1	의정부시	41.2	군포시	27.0
안성시	49.3	남양주시	41.1	안양시	26.7
동두천시	48.9	평택시	41.0	김포시	24.2
양주시	46.2	수원시	40.6	파주시	22.2
의정부시	44.5	하남시	40.0	화성시	22.1
평택시	44.5	김포시	40.0	오산시	22.0
하남시	42.0	오산시	39.8	광명시	22.0
파주시	41.5	동두천시	39.4	수원시	21.4
안산시	40.9	안양시	38.9	구리시	21.2
구리시	40.8	포천시	38.4	광주시	20.9
남양주시	39.9	광명시	38.4	남양주시	19.0
광명시	39.7	고양시	38.3	부천시	18.5
부천시	38.5	과천시	38.3	하남시	17.8
오산시	38.3	구리시	38.0	양주시	17.2
수원시	38.0	안성시	37.6	양평군	16.3
광주시	37.8	군포시	37.4	안산시	15.2
시흥시	37.2	의왕시	37.3	시흥시	14.7

화성시	36.3	양주시	36.5	여주시	14.6
성남시	36.1	성남시	36.3	평택시	14.6
김포시	35.9	파주시	36.2	의정부시	14.3
군포시	35.6	이천시	35.6	안성시	13.1
의왕시	35.2	용인시	33.0	이천시	11.9
안양시	34.4	양평군	31.5	동두천시	11.7
고양시	32.3	여주시	29.7	가평군	11.3
과천시	28.0	가평군	28.8	연천군	9.7
용인시	28.0	연천군	28.6	포천시	9.0

주: 2014년 하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제4장 결론

## 제1절 분석결과

### 1. 수원시의 산업 특성

수원시는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이 전체 산업 중 가장 큰 비중(44.1%)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일 높은 구는 팔달구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광업·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영통구이다. 이는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그리고 그 협력업체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수원시는 평균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2.0%에 그쳐 수원시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액 10억 원당 취업자 수로 계산되는 취업계수를 살펴본 결과 수원시는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취업계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서 고용창출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수원시의 고용 및 실업 특성

성별, 연령계층별 취업자 특성을 살펴보면 수원시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수원시만의 청년 미취업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이 수원시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원시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도 내에서 21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수원시의 50~60세 남성고용률은 79.8%로 경기도 내에서 6번째로 낮은 순위에 해당되어 희망퇴직 등으로 직장을 잃은 베이비붐 세대의 남성에게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원시는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9위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0세~49세 여성 고용률은 경기도 내 지자체 중 20번째로 다소 낮은 편에 속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수원시의 임금근로자수 비중이 2014년 하반기 기준 82.4%로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2번째로 높다. 수원시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17.6%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자리의 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사자 직업별로는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3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숙련된 일자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18.4%p 감소하였으며,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도 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 중위권에 해당한다. 실업률은 2012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하반기 실업률은 2.7%를 기록하며 경기도 내에서는 11번째로 낮다. 이는 수원시에 갑자기 일자리가 증가하여 많은 수원시민들이 취업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인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인근의 지자체 보다 수원시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집계를 위해 선정한 표본지역 중에 취업

준비생이 많은 고시촌 지역을 다수 선정해서 빚어진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 수원시는 경인지방통계청에 정정을 요구했고 합리적 이의 제기라고 판단한 통계청이 이를 받아들여 표본지역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 3. 수원시의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4년 기준 7.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팔달구로 10.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장안구(9%), 권선구(7.8%) 등의 순이다. 영통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에 불과했다. 2013년까지는 15~29세 연령대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도에는 5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0.9%p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4.2%p 급증하였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과 비교해보면 수원시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비중은 9번째로 높은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0번째로 낮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고 있는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학, 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이후 재학, 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8.6%p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육아,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도 해당기간동안 6.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로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은 해당기간 동안 0.5%p 감소하였다.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고졸 비경제활동인구가 12.1%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도 같은 기간에 4.8%p 증가하였다. 반면 중졸이하 비경제활동인구는 2008년에 비해 1.5%p 감소하였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과 비교해보면 고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자체들 중에서 9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1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제2절 정책제언

### 1.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2008년~2012년에 수원시는 평균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2.0%에 그쳤다. 이는 삼성전자가 타지자체로 이전한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삼성전자의 R&D 인력들도 서울 이전을 계획한 상태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수원시의 산업구조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수원시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산업 외에 특별한 성장 동력 장착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드론산업 등 첨단산업과 연계된 수원시만의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이 시급하다.

성별, 연령계층별 취업자 특성을 살펴보면 수원시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수원시만의 청년 미취업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수원시의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 2. 경력자들의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수원시의 남성고용률은 경기도 내에서 21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수원시의 50~60세 남성고용률은 79.8%로 경기도 내에서 6번째로 낮은 순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남성들이 희망퇴직 등으로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50~60세 남성고용률이 경기도 전체에서도 하위 6위를 기록한 만큼 노동가능인구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의 창업보육센터는 시니어 특화로 지정되어 경기도에서 해마다 1억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을 정도로 시스템 구축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50~60세 남성고용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55세 이상의 장년 경력자들과 30~40대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원시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년취업지원금(최대 570만 원)의 신청도 가능하다.

55세 이상의 퇴직한 사무직 경력자들을 2년 계약직, 월200만 원으로 자신들이 쌓아왔던 기존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살려서 취직을 할 수 있는 ‘장년 취업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30~40대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수원시 실업률 유형 분석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수원시의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남경현, 임우연 (2012), 지역별고용조사 2012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통계청
- 이종수 (2008),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및 일자리 창출 시책 평가와 모델개발, 노동부
- 이진면 (2005). 지역통계의 문제와 개선 방향, 제8회 지역발전포럼 발표자료
- 장하성 (2014), 『한국 자본주의』, 헤이복스
- 전병유 (2006), “우리나라의 지역 간 고용격차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68호, pp.205~235.
-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33권 3호, pp.89~127
- OECD, “Disparities in Regional Labour Market,” Employment Outlook, 2000
- OECD,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Nov. 2012

# Abstract

The unemployment rate of Suwon in the first half of 2013 was recorded 5.1%. This is the highest level among the 156 cities and counties across the country.

It was not too much to say that almost parts of the local government tried to attract compani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divisions from the mid 2000s to the early 2010. Because the number of making jobs by attracting businesses achievement is falling in for his share.

The majority of companies believe that there are attractive merits on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Local governments also tried to attract these companies. But it was not easy to attract business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reality. Even if it succeeds in attracting businesses, there is a study that the effect is not large(GRI 2014). This means that even if local governments attract companies, the effect does not reach a general consensus.

Therefore, when the local government attract companies, he needs to establish a regional economy growth mechanism of relating to increasing employment and decreasing unemployment 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cause of high unemployment in Suwon,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ccordingly.

First, it will be conducted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employment rate as defined in

economics.

Second, it will be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regional employment statistics and discuss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employment indicators.

Third, it will be analyzed the divided type for the unemployment rate to industrial factors and demographic factors. In demographic factors, it will be determined examining main analysis of the type of unemployment in Suwon through observ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labor movement status, non-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active population.

The range and method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t spatial ranges from Suwon and temporal ranges from 2008 to 2014. It will be mainly used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method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will conduct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employment rate.

Second, we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tatistics, we will analyze the economic implications related to the main discussion of the employment.

Third, we will analyze data by separating types of industrial from population characteristics by using regional employment statistics unemployment in Suwon.

Fourth, we will suggest necessary policy in which establish employment wit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In conclusion, Suwon, there is a high industrial property in the share of service sector compared to other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Next industrial property in turn is 'wholesale and retail, food, hospitality', 'mining and manufacturing'. Also, a result of examining the employment coefficient which is calculated employee per production output(1billion won), employment coefficient of Suwon appears low compared to other municipalities. And it acts as a factor slowing employment generating ability.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Suwon is determined the ranking ninth and this is relatively high ranking in Gyeonggi-do 31 cities. But 30-49 year-old female employment rate is rather low, it belonged to the 20th of Gyeonggi Province within the municipality.

The proportion of workers by wage earners status of Suwon in the second half of 2014(82.4%) was ranked second of Gyeonggi Province within the municip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s very important time to discover of a new growth engine industry. The GRDP growth rate in Suwon end in a mere 2.0% in 2008-2012. This is due to relocation of Samsung-Electronics from Suwon to other region. In addition, the remains of R&D manpower plan to relocate from Suwon to Seoul.

Therefore, it is very urgent for Suwon to discover the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which is related to the high-tech industry.

Secondly, Suwon requires special program in strengthening of the reemployment of experience. 50-60 year-old male employment rate is belonged to the 25th(79.8%) of Gyeonggi Province within the municipality.

Although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tie in with 50-60 year-old male unemployment rate rise, it is much higher than the other city average. To solve mismatching problem, we(Suwon) is so in need of the introduction of solution program.

## 수원시 실업률 유형 분석 연구

---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5년 10월 15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

비매품 ISBN 979-11-85686-5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